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5~1996

1995. 12. 28.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世界情勢는 전반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탈냉전추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地域紛爭 지속과 중국·프랑스의 핵실험, 구사회주의권의 좌파정당 득세 등 不安定的이고 流動的인 측면도 노정하였다.

東北亞에서는 지역국간 탈냉전적 양자관계 재조정, 다자간 경제·안보협력 논의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冷戰的 舊態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중·일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역내 국가간 경제마찰 등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安保懸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변 4국은 남북한간 關係改善을 통해 한반도의 緊張局面이 解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등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확대 競爭을 지속함으로써 韓半島問題의 國際化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내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 대외고립 등으로 인한 危機狀況 속에서 '유훈관철'이라는 구호아래 現狀維持 政策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구조적 문제, 홍수피해 등으로 인

하여 食糧 및 經濟難에 봉착해 있다. 북한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에 응한 이유중의 하나도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과 국제고립을 타개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의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南北當局間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및 부여간첩사건 등으로 남북한 관계는 더욱 梗塞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에도 북한의 남북대화 회피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1995년의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한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1996년의 정세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本 報告書의 분석과 전망이 통일문제 관련기관과 각계인사들의 남북한관계 전개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5년 12월 28일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要 約

要 約

1. 統一環境

가. 世界情勢

1995년도 世界政治와 軍事·安保情勢는 전반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탈냉전추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地域紛爭 지속과 중국·프랑스의 핵실험, 구사회주의권의 좌파정당 득세 등 不安定的이고 流動的인 측면도 노정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실현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은 1996년에도 세계 안보문제에서 同盟國과의 役割分擔을 모색하면서 주도적인 균형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경·마약·테러 등 全地球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多者協力の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유엔의 역할재편문제가 중요 懸案으로 대두될 것이다.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에 이어 1996년 중으로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이 체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1996년에도 核非擴散을 위한 노력은 큰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마·러 양국의 국내정치 보수화로 인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II) 비준 지연 등 核軍縮 노력은 여전히 담보상

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992년 가을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동유럽권의 좌파 득세 추세는 1995년 11월 크바스니엥스키의 폴란드 대통령 당선과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공산·민족계 부상으로 반영되고 있는 바, 1996년 6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左派政黨 득세가 시장경제체제 채택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世界經濟는 1995년초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촉진될 것이며, 미국 등 先進國의 경제회복과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세계무역의 自由化를 先導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NAFTA와 APEC에 가입하고 있으며, EU 와도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地域主義化에 따른 保護貿易主義化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東北亞情勢

1995년 동북아에서 미, 일, 중, 러 4국은 經濟協力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국익확대를 위한 경쟁을 심화하였다. 지역국간 탈냉전

적 양자관계 재조정, 다자간 경제·안보협력 논의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정세는 아직 冷戰的 舊態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중·일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역내 국가간 경제마찰 등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安保懸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관계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아 안보의 최대 威脅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며, 1995년 10월 중국의 신속대응군 창설 결정과 11월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 발표 등에서 나타나듯이 일·중의 軍事大國化 추세는 1996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알력, 미·일간 무역마찰, 일·중간 상호견제 등 역내 쌍무관계의 葛藤은 기본적으로 역내 既得權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중·러의 이해관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대만문제와 중국내 인권문제로 인하여 미·중간 緊張關係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며, 러시아내 민족주의·좌파 세력 부상으로 미·러간 협력무드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不安定要因을 사전에 관리하고 信賴構築을 制度化하기 위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이 계속 모색될 것이나,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지역국들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多者間

안보體制 구축이 1996년에도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6년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일본의 중의원선거 가능성, 대만의 총통선거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정치 일정 및 鄧小平 사후에 대비한 중국의 지도체제 공고화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4국 공히 해외문제보다는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4국의 국내문제 우선 해결 자세는 주변4국 양자간 마찰 해소 등 동북아지역 緊張을 緩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東北亞 安보環境의 변화추세 속에서 周邊 4國은 한반도문제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과 地域秩序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주변 4국은 남북한간 關係改善을 통해 한반도의 緊張局面이 解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등 한반도에 대한 影響력 확대 競爭을 지속하고 있다. 미·일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러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1996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韓半島問題의 國際化는 심화될 전망이다.

2. 北韓情勢

가. 對內情勢

1995년에도 김정일은 노동당 總秘書와 主席職을 공식 승계하지 않았다. 대신 김정일은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의 잦은 군관련 행사참여와 군부대 방문 등 군사부분에 집중된 행적 때문에 軍部와 김정일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對內 政策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일이 발표한 네편의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 대외고립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유훈관철'이라는 구호아래 당분간 現狀維持 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

1996년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에 대한 3년간의 緩衝期가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정일의 公式承繼를 완료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經濟難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위하여 서방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홍수피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이 경제침체, 특히 食糧難을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활난으로 인해 개인 돼기밭과 텃밭을 이용한 개인농과 암시장 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뇌물, 줌도둑, 절취 등 개인주의적 逸脫行爲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해 북한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대내적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思想統制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 대한 사상교육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軍事力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승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內部結束을 목적으로 대외위협을 빌미로 전쟁준비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의도적인 停戰協定 위반행위를 통해 미국과의 장성급 대화를 요구하는 등 대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 對外關係

1995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유도하고, 미국과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KEDO와 경수로공급협

상을 타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했다. 1996년에는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및 미국의 대북 추가 經濟制裁 완화조치 등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확대될 것이며, 북·미간 민간교류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美 議會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압력하에 북한의 人權問題, 미사일 개발·수출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관계에 신중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1995년 일본과 修交會談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쌀회담을 성공시켰지만,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현저한 입장차이로 관계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96년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의 여세를 몰아 대일 수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가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북관계를 추진하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취지의 對北修交 3원칙을 천명한 만큼,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한 북·일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북·중관계는 이념적 유대보다는 經濟的 實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도, 북·중간 특유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같은 북·중관계

의 특징은 江澤民의 한국 방문시 북·중 군사동맹조약을 파기할 의향이 없다고 천명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났다. 1996년 북한은 경제난과 對外孤立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북한의 대미·일 경사 가능성을 저지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공식 승계할 경우 江澤民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지도부의 世代交替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북·중 관계가 과거와 같은 血盟關係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5년 북·러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와 북·러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기조 위에서 재정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는 1996년 만료되는 「朝·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 통보하면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시사하였다. 1996년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대미·일 견제 차원에서 협력을 추구할 것이나, 북·러간 협력관계는 과거의 군사적 혈맹관계 보다는 새로운 관계정립 차원에 국한될 것이다.

다. 對南戰略

1995년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간간

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을 人身攻撃하는 동시에 남한 내부의 분열과 국민의 對政府 불신을 유도하기 위한 攪亂戰術을 펼쳤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은 무장간첩 남파로 절정에 달했다. 다른 한편, 북한은 한국정부에 쌀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남북한 현안 중의 하나였던 우성호 선원을 송환하는 등 대남 宥和政策을 펼치기도 하였다.

1996년 북한은 체제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총선과 정치권 개편 등 정치현안으로 남한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대남 비방·선전을 통해 內部分裂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방식을 고수하여 남한 배제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중되는 식량난 해결의 일환으로 남한으로부터 추가 쌀지원 등의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3. 南北韓 關係

가. 輕水爐供給協商과 北韓 核問題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미간의 사전 조율과 KEDO와 북한간의 두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상호 異見의 절충이 이루어짐으로써 12월 15일 輕水爐供給協定이 서명·발효되었다. 대체에너지제공과 사용후연료봉의 처리·보관문제도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5만톤의 증유가 북한에 제공되었으며, 사용후연료봉의 건식 처리·보관이 합의되었다.

향후 輕水路事業은 신포지역의 토질탐사, 상업계약 체결,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 선정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비용 분담, KEDO와 북한간 협정이행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을 둘러싸고 관련국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클린턴행정부나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공히 경수로 지원비용 분담을 떠맡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한편, 경수로공급협정의 체결에 따라 북한의 미동결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이 재개될 것이다. 사용후연료봉에 대해서는 199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밀폐·보관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核疑惑 해소문제는 상당기간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연료봉의 제3국 이전은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후에 비로소 시작될 것이고, 特別査察에 관한 논의도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南北韓 對話

1995년 南北當局間 對話는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 통일전선전술의 지속,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 북한의 남한배제 전략에 따라서 공전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쌀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및 비너스호 억류사건, 안승운목사 납북사건,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및 부여간첩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남북대화는 더욱 梗塞局面에 처하게 되었다.

1996년에도 북한의 남북대화 회피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은 당분간 경수로사업의 이행과 북·미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남한의 國內政局이 불확실하고 총선거가 4월에 실시될 것이므로, 적어도 상반기중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북한이 계속하여 南北對話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미관계 진전과 대일 수교교섭 재개를 위해서도 북한은 최소한 형식적 차원에서나마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1995년 말 북한의 갑작스러운 우성호 선원 송환 결정은 그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事例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1996년 상반기중 당국간 대화의 재개

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하반기에 들어서 북한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사안 중심으로 特使交換과 같은 비정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심각한 食糧 및 經濟難의 타결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요청 맥락에서 남북대화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당총비서 또는 국가주석에 공식취임할 경우 남한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정당·사회단체 등의 주요인사를 초청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나 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 交流·協力分野

1995년 한해동안 經濟交流·協力は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물자교류 규모가 1994년에 비해 약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대남 반출이 수출총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南北交易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에도 북한은 外貨難과 수출상품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남북교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남북한 긴장관계를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급

격한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1995년 11월 말 57건에 596명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핵문제 대두 이전인 1991~92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1996년에도 북한이 外部思潮의 유입에 대해 극히 경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수로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남한기술자의 訪北을 포함한 인적교류가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또한 남북한 교류는 올해에도 제3국에서 학술 및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人道主義的 事案

북한은 離散家族의 상봉·교환으로 남한과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지고 개방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95년에도 단지 14명의 이산가족만이 제3국을 통해 相逢하였을 뿐이다.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한, 1996년에도 이산가족의 상봉·교환은 진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상봉 및 서신교환과 북한거주 친인척에 대한 送金이 늘어날 전망이다.

1995년에는 우성호 선원과 안승운목사의 납북으로 인해 拉北者 問題의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었다. 비록 연말에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우성호 선원을 우리측에 인도하였지만, 그외의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서로의 人權狀況을 둘러싸고 유엔에서 공방이 있었다.

시베리아지역 벌목장이나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귀순은 계속되었으며, 11월말까지 30명 이상이 입국하였다. 脫北者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북한 공민증을 소유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북한의 경제난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한 北韓住民의 탈출현상은 1996년에도 증가될 전망이다.

북한의 人權問題는 북한당국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를 원하지 않으나, 북한 탈출주민의 증가는 물론 북·미관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남한사회와 한반도문제 關聯國家 사이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마.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남북한 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1995년 중 國際舞臺에서의 남북한 접촉과 협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남북한 정부대표간

의 접촉은 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민간차원의 접촉은 동북아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對北 援助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처럼 제한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북·미 平和協定 체결 주장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간의 外交戰을 야기시켰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와 북한내 인권 실태를 왜곡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1996년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협력과 공동보조가 부분적이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 目 次 -

I . 統一環境	1
1. 世界情勢	1
가. 政治와 軍事·安保	1
나. 經濟	4
2. 東北亞情勢	7
가. 東北亞 4國의 相互關係	7
나. 東北亞 安保環境	24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30
가. 韓·美關係	30
나. 韓·日關係	32
다. 韓·中關係	34
라. 韓·러關係	37
II . 北韓情勢	40
1. 對內情勢	40
가. 權力承繼	40
나. 政策路線	43
다. 經濟動向	44
라. 社會動向 및 人權實態	50
마. 軍事動向	54

2. 主要 對外動向	56
가. 北·美關係	56
나. 北·中關係	61
다. 北·日關係	64
라. 北·러關係	67
3. 對南動向	69
III. 南北韓 關係	76
1. 輕水爐供給 協商과 北韓 核問題	76
가. 現況	76
나. 展望 및 豫想問題點	81
2. 南北韓 對話	83
3. 交流·協力分野	88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88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93
4. 人道主義的 事案	96
가. 離散家族問題	96
나. 拉北者問題	97
다. 人權問題	98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00
# 부록: 1995년도 主要事件日誌	103

I. 統一環境

1. 世界情勢

가. 政治와 軍事·安保

(1) 地域紛爭에 대한 美國의 仲裁力 強化

1990년 이후 미국은 國內問題 우선 해결원칙과 자국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地域紛爭에 개입하는 가운데 유엔 등 다자기구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소말리아, 보스니아 및 르완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유엔과 同盟國들의 지역분쟁 해결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어 1995년부터 지역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간의 의견대립으로 보스니아사태 해결이 어렵게 되자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적극 仲裁하였다. 이에 따라 보스니아 분쟁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을 체결(12.14)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유럽내 정치·안보적 영향력이 재확인되었으며, 유럽국가들은 域內問題에 대한 미국 역할의 불가피성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다.

1996년에도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스니아 사태, 중동평화문제, 북한핵문제 등 세계 安保問題들을 적극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시에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주의 접근과 지역 동맹국들과의 役割分擔을 모색할 것이다.

(2) 核軍縮 및 核非擴散 노력의 擴大

1995년 강대국간의 核軍縮 노력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러시아는 1993년 12월 의회 선거 이후 부상한 民族主義 세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이 ABM 개발을 지속하는 한 START II를 비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4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장악하에 있는 美 議會도 전국적인 ABM망의 조기 배치를 주장하면서 START II의 비준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핵확산 방지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178개 NPT 서명국들이 NPT의 무기한 연장에 서명하고, 1996년 이내에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체결하기로 합의(5.12)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CTBT 체결 이전까지 核能力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두 차례(5.15, 8.17)와 다섯 차례(9월 5일 이후 12월 28일까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NPT 무기한 연장결정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NPT의 무기한 연장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1996년에는 제 3세계국가들에 대한 핵확산 감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전

면 핵실험금지조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과 프랑스의 核實驗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러간 핵군축 노력은 양국 국내정치 의 保守化 가능성으로 인해 담보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러시아 및 동유럽내 左派勢力의 浮上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서 舊共產主義者들에 의해 조직된 정당들의 득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1992년 가을 구공산당 후신인 노동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며, 폴란드에서는 1993년 9월 총선시 구공산당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 제1당으로 부상한데 이어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 알렉산더 크바스니에프스키가 바웬사 현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11.19)되었다. 헝가리 총선에서도 사회당이 승리('94.5.29)하였으며, 1995년 7월 실시된 아르메니아 총선에서 左派政黨이 승리하였다. 또한 러시아 총선(12.17)에서도 공산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左派政黨 득세가 시장경제체제 채택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급진적인 개혁 보다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改革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NATO와 EU에 대한 관계증진 및 가입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 經濟

(1) 世界貿易機構(WTO)의 출범으로 인한 貿易自由化의 持續
그 동안 世界交易을 관리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해체되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1.1)하였다.

WTO체제는 GATT의 한계를 보완한 보다 강력한 國際 經濟機構이다. 즉, GATT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관리·조정하고, 회원국간 국제무역 관련 법·제도·관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을 증진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신규 가입(1.1)으로 회원국 수가 15개국으로 확대되어 유럽지역의 經濟統合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남미지역까지 포괄하는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R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로 발전될 전망이다. 아·태지역국가들은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역내국가 18개국을 포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WTO체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貿易의 自由化를 선도함으로써 배타적 경제블럭화

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NAFTA와 APEC에 가입하고 있으며, EU와도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따른 保護貿易主義化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亞·太地域內 貿易自由化의 실천단계 進入

APEC은 1989년 창설시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하에 역내국가간 무역자유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에서 先進國은 2010년까지, 開發途上國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완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5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指導者會議에서는 각국의 입장을 수렴한 오사카선언이 발표(11.19)되었다. 同 선언에서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①보고르선언에서 설정한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확인, ②「행동지침」(Action Agenda) 채택을 통한 실천단계 진입, ③범세계적 자유무역에 반하는 내부지향적 무역블럭 형성 반대, 개방적 지역주의 기조 유지 및 APEC 가맹국의

WTO 가입 지지, ④식량·에너지·환경 등 장기과제에 대한 공동 조치 착수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1996년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에 행동계획을 제출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APEC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방적 지역주의와 包括的 自由化를 계속 추구할 경우, 세계 총 생산의 60%와 세계무역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세계경제의 운용방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PEC이 미·일, 미·중, 한·미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들간 通商摩擦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경우 다자간 무역 자유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동아시아의 經濟的 역동성 持續

1994년에 이어 1995년에도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기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5년 2/4분기에 한국 9.6%, 중국 8.9%, 홍콩 4.8%, 대만 6.5%, 인도네시아 6.8%, 말레이시아 9.3%, 필리핀 4.9%, 싱가포르 8.2%, 태국 8.5%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높은 國內總生産 증가율을 보였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力動性은 중국 및 새로운 신흥공업국과 한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중국이 2000년대에 세계 10대 經濟強國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力動性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은 APEC을 때

개로 하여 역내 국가들의 市場開放에 주력하는 한편, 각국에 대한 개별적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유럽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投資擴大와 市場進出을 강화할 것이다.

2.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4國의 相互關係

(1) 美·日關係

1995년 미·일간에는 미군의 일본인 성폭행사건(9.4), 일본내 미군 지위협정개정과 오키나와 주둔기지 반환 및 안보조약 개정 여론 확산, 통상마찰 등으로 葛藤이 深化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對日 안보공약으로 미·일간 안보협력은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미·일은 냉전이후 상호 안보협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1월부터 안보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美 國防部는 「동아시아 전략보고서」(2.27)와 「나이(Nye)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 등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미국의 世界戰略에 艱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위에 미·일간 「신안보 공동선언」이 모색되었으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내문제로 인하여 오사카 APEC 지도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共同宣言의 발표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일간에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과 오끼나와 미군기지 감축 등 안보협력체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일은 협정의 개정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본내에서 협정개정 촉구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끼나와와 나가노 등 전국 133개 지방의회는 지위협정 개정요구 決議案을 채택하였으며, 오타 오끼나와현 지사도 지위협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양국간 합의에 반발하면서 주일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용지 賃借契約 갱신에 대한 署名을 거부(9.28)하였다.

미국은 미·일 安保條約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오끼나와기지 정리·통합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10.11)하고 있으며, 기지문제가 안보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견지(10.18)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끼나와현 지사의 임차계약 갱신거부에도 불구하고 총리 직권으로 기지임대를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11.21)하였다. 이에 따라 기지임차계약 연장문제는 일단 매듭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여론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經濟分野에서는 자동차협상 문제가 1995년 미·일간 최대 무역마찰 요인이 되었다. 미·일은 「포괄경제협약」의 일환으로 1993년 9월 미국제 자동차 및 부품의 對日 수출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였

으나,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수치목표」 달성을 놓고 일본측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난항이 거듭되었다. 미국의 대일 보복관세위협과 일본의 WTO 제소 등으로 비화되었던 자동차협상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한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6.28)되었다. 그러나 미·일간 자동차협상 타결 이후에도 협정이행 여부를 둘러싼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특허법 개정, 제지시장 개방, 저작권 보호기간 개정, 필름시장 개방, 반도체협정 갱신, 항공 이원권 허용문제 등도 미·일간 通商摩擦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일간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對日 貿易赤字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일 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일이 「포괄경제협약」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6.16)함으로써 양국간 貿易葛藤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199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행정부가 對日 통상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일간에는 경제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일은 脫冷戰期 동아시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안보분야에서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문제와 기지반환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協力關係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美·中關係

1995년 미·중간에는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핵실험

실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립과 마찰이 지속되었다. 미·중관계의 악화는 미·중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는 미·중관계를 1979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후퇴시킨 결정적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정부는 친대만 성향의 공화당에 의해 장악된 의회의 요구를 수용, 李登輝 총통의 私的 訪美를 허가(5.22)하였다. 또한 美 上院 외교위원회는 대만의 유엔가입 지지안을 통과(6.7)시키고, 下院도 티벳에 대사 파견, 대만관리의 訪美 허용 및 「자유아시아방송국」 설치를 제의한 「외국원조법안」을 통과(6.8)시킴으로써 대만지지 입장을 노골화 하였다. 李登輝 총통이 방미기간(6.7~12) 동안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접촉하고 중국과 대만을 대등한 정부라고 역설하자,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견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李登輝 총통을 대만독립분자로 매도하였다.

중국지도부는 權力承繼의 과도기에 처하여 主權問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중국은 李登輝 총통의 미국방문 이후 고위 지도자 교환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동시에, 李道豫 주미 대사를 소환함으로써 로이(S. Loy) 駐中 美大使 이임(6.15) 이후 미국과 무대사관계를 감수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미사일발사 훈련을 실시(7.21

~26, 8.15~25)함으로써 미국의 대대만 관계개선 정책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외무장관 회담(8.1)과 미국 타노프 국무차관의 방중(8.24~27) 및 뉴욕 정상회담(10.24)을 계기로 대만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은 하반기에 들어 다소 완화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하고, 중국도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미 대사를 귀임시키는 등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자 宥和의 姿勢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對中 人權狀況 개선 요구도 미·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美 國務部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내 인권상황을 비판(2.1)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의 인권 유린 규탄 결의안을 제출(3.8)하였다. 중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중간 마찰은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인 해리 우(吳宏達) 체포(6.19)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중국이 해리 우를 간첩혐의로 투옥(7.8)시킨 후, 미 의회는 해리 우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내 인권상황 감시 요구 법안을 통과(7.20)시켰다. 北京 세계여성대회에 힐러리 여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의 파견 대가로 중국이 해리 우를 석방(8.24)함으로써 인권문제로 인한 미·중간 마찰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반체제 인사인 魏京生을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하여 14년 형을 선고(12.13)

함으로써 중국내 인권문제가 미·중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93년말 이래 확대되어 온 미·중간 軍事·安保 交流도 상호 상대방에 대한 불신 누적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까지 동아시아에 대한 전진배치전략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베트남과 조기 수교(8.4)하는 등 중국 견제정책을 적극화 하였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해 미사일과 핵 기술을 제공하고, 핵 확산금지조약 무기연장 합의(5.12) 직후 핵실험을 실시(5.15, 8.17)하고, 미국에게 미사일기술통제 및 원자력협력에 관한 협상 연기를 通報(5.28)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확산방지 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방미가 취소되는 등 1995년 상반기 미·중간 군사교류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중 뉴욕 정상회담에서 군사교류·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10.24)한 후, 조셉 나이(J. Nye) 미 국방차관보의 訪中(11.14~18)이 이루어지는 등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미·중간 군사교류가 재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군사교류 재개 움직임은 미·중이 동아시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즉,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위협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도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 군부와의 접촉 확대를 통해 鄧小平 사후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문제, 무역역조문제 및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중간 經濟摩擦이 끊임없이 야기되었으나, 양국의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상호 경제교류는 증대되었다. 1994년부터 1년동안 지속되어 온 지적재산권협상이 결렬(1.28)된 후, 미국이 일부 중국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발표(2.4)함으로써 미·중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오리리 미국 에너지장관 방중시(2.19~24) 60억달러 상당의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불법복제품 제조공장 폐쇄를 약속하는 등 경제법 개정을 약속함으로써 지적재산권 협상이 타결(2.27)되었다.

또한 對中 무역역조폭(1994년 294억달러)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중국산 섬유류의 對美 수출쿼타 삭감 조치를 발표(5.4)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무역·투자제도 개선과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對中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미국 크라이슬러사와의 자동차합작사업계획을 파기하고 독일 벤츠사로 합작선을 전환(7.12)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제9차 「중·미 상무연합위원회」를 개최(10.17~18)하고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시 수입관세 대폭 인하와 수입허가증제 폐지 등을 통해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약속(11.19)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마찰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미·중은 항공협정을 체결(12.23)하여 직항로를 개

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에도 미·중간 緊張局面은 지속될 것이다.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탄압문제와 대만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고,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반발로 중국이 對美 양보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鄧小平 사후의 정치 변혁기에 중국내 人權狀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과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로 대만에서 獨立主張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미·중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이 「군비억제 및 군축」 제하의 國防白書を 발간(11.16)하여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고 있고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이 체결될 예정인 1996년 중반이후 핵실험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며,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訪美와 샬리카시빌리(J. Shalikhvili) 미 합참의장의 訪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6년 미·중간 군사·안보 교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美·러關係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95년도 연두교서에서 강대국 지위회복과 국익확보를 外交政策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2.16)했다. 러시아내 국익우선추구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보스니아사태 수습, NATO의

확대, 러시아의 對이란 원전제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러간 외교마찰이 지속되었으나, 유엔 50주년 세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양국관계가 회복 추세를 보였다.

보스니아사태와 관련, 러시아는 NATO의 공습과 미국의 일방적인 평화협상 추진방식을 비난하면서 UN안보리에 공습중단 결의안을 제출(9.11)하고 공습이 계속될 경우 세르비아제에 무기를 공급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미국은 東歐圈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제2의 보스니아사태 예방 등 유럽안보의 요체로 인식, 1995년 말까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크 등의 NATO 가입 절차 및 시기문제를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하여 1997년초 NATO 정상회담시까지 NATO 확대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10.7)하였다. 러시아는 NATO가 동구권 및 구소련 지역으로 확대되면 NATO와의 平和同業者계획에서 탈퇴하고 러시아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경고하면서 NATO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측의 거듭된 對이란 원전 제공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내 원전 공사를 강행중인 가운데 400MWe급 원자로 2기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美국무부는 유감성명을 발표(9.6)하였고, 美 上院은 청문회(9.12)를 개최하여 對러원조 삭감 심의에 착수하였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世界頂上會談을 기회로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10.23)하였다. 미·러 정상은 새로 구성되는 보스니아 국제평화유지군에 러시아군이 참여하는 등 보스니아 평화정착 과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개혁정책 지원을 재확인 함으로써 미·러관계가 다시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도 미국은 G7회담을 통해 러시아 改革政策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서방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세계은행의 6억달러 규모 대러 차관을 승인(6.7)하였으며, 「파리클럽」에 대한 러시아의 1995년도 채무액 80억달러를 11억달러로 감소시키는 등 러시아의 대외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그러나 러시아 政局不安으로 인하여 1995년 9월 현재 미국의 對러 직접투자는 4,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1996년 미·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選舉를 의식하여 자국 이익 우선적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이 감소될 수 있고, NATO 확대문제 등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공히 국제질서 안정유지와 對內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996년에도 미·러의 정치·경제적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4) 日·中關係

1995년 일·중은 喬石 全人大 상무위원장의 방일(4.10~17)과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방중(5.2~6) 등 고위 지도자 교환 방문을 통해 양국간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발사 실험, 일본의 不戰決議案, 중국인의 對日 민간 배상 요구 등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갈등과 대립이 확산되었다.

1994년까지 일·중 양국은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은 가능한 덮어두고 경협 등 실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1995년에는 일본에서 우익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중국에서도 江澤民 지도부가 국민과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중관계가 경색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중국침략시 중국 민간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3.7, 5.4)하였고, 일본의 중의원에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충분한 사죄입장을 밝히지 않은 不戰決議案이 통과(6.9)되자 이를 일본의 침략전쟁 은폐 기도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일본 문부상 시마무라(島村)의 對中 침략전쟁 부인(8.9) 발언도 일·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중간 마찰은 江澤民 주석의 한국방문시(11.14)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江澤民 주석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과 협력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 가능성을 저지

하자는 내용의 한·중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중간 긴장국면은 고노(河野) 일본 외무상의 침략전 사과 발언(12.19)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중의 군비증강과 역내 役割增大를 둘러싼 競爭도 양국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쳐 核實驗을 실시(5.15, 8.17)하고, 황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10.16)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였으며, 일본도 군사비를 증액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군사 대국화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에 항의, 1995년도 對中 무상원조액을 1994년도 제공액(78억엔) 보다 축소하기로 결정(5.22)하고, 인도적 부문을 제외한 대중 무상원조 전면 동결방침을 전달(8.30)하였다. 이와 같은 일·중간 정치·군사적 갈등은 안보회담(1.13), 니시모토(西本) 일본 통합막료의장(2.19~23)과 무라야마 총리 방중 및 喬石 全人大 상무위원장 방일 등 고위 지도자 교환 방문을 통해 완화되었으나, 양국이 역내 질서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일·중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일·중간 경제교류는 다케무라 대장상의 訪中(1.9~15) 등 경제장관 교환방문을 계기로 중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479억달러에 달하였던 일·중간 교역규모가 1995년에는 560억달러

에 달하여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국은 일본의 2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일본이 중국의 軍事大國化 견제를 위해 제3차 대중 엔차관의 제공 기간, 금액, 대상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일·중간에 마찰이 야기되었다.

1996년 일·중은 연례 안보회담과 遲浩田 국방부장의 방일 등을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증진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시장 확보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만 하고, 중국도 경제발전과 江澤民 지도부의 입지 강화를 위해 차관의 확보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서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개선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지지 성향을 가진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 집권시 일·대만간 관계개선이 예상되며, 일본은 엔차관을 중국의 軍事力 증강정책 저지를 위한 지렛대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중국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1996년에도 일·중 관계는 경쟁속의 협력관계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일·중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民族主義 추세를 고려할 때, 일·중간 과거사 문제로 인한 마찰도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日·러關係

1995년 일·러간에는 정부간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치·안보 대화 및 군사교류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북방영토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진전이 없었다.

도쿄에서 개최된 외무장관 회담(3.4)에서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노(河野) 일본 외상은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사면에서도 양국은 국방장관 교환방문에 합의(2.26)하고 합동해상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9.15~9.17)하는 등 군사교류·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신군사독트린('93.12)에서 “敵對國家 不在”를 선언한 데 대해, 일본도 “소련의 침공”을 가상하여 작성했던 전략을 대폭 수정한 「신방위계획대강」(11.28)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이 정치·안보대화 및 군사교류 확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主導權을 견제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北方領土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일본의 의도가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러관계에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반환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연초 외무장관회담(3.4)에서는 북방영토문제를 기존의 협정에 입각하여 처리한다는 원칙만을 확인하였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평화조약실무회의」(9.8)에서도 북방영토문제를 지속

적으로 협의한다는 원칙에 재협의하였을 뿐 협상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經濟問題와 관련, 일본은 대러 무역·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 용자 4억달러를 러시아에 제공(4.1)하였으며, 자국기업에 대해 7억달러 규모의 대러 무역보험 보증실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일본의 이토추 상사·石油公團 등은 미국의 엑슨사와 공동으로 러시아정부와 아시아 최대의 사할린 대륙붕 유전(925억배럴) 및 가스(4,250억평방미터) 개발계약을 체결(5.29)하였다. 다만, 일러는 쿠릴열도 부근 해역의 어업분쟁 교섭에 합의('94.11)한 후 세차례에 걸쳐 일본어선의 안전조업 문제를 협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996년에도 일·러는 양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북방영토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러간에는 정치·경제·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러시아가 大選을 앞두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의 경제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며, 일본도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등 실리위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북방지역 안보환경을 보다 호전시키고 北方領土問題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6) 中·러關係

중·러 양국은 1995년에도 고위 인사들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안보와 경제면에서 友好協力關係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양국간 군사교류와 러시아의 對中 무기판매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중·러간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증진 추세는 동북아 및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상호간 전략적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국측에서는 江澤民 국가주석(5.7~10), 李鵬 총리(6.25~28), 전기침 외교부장(9.21~23) 등 최고위 인사들이 방러, 옐친 대통령 및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 5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頂上會談에서 양국은 상호 관심사와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역 확대, 러시아내에서 개정요구가 활발한 東部國境線協定 준수문제 등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원자로 제공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李鵬 총리와 전기침 외교부장 방러시에는 범인인도협정 등 8개항의 협력협정이 서명되고 경제·군사협력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러시아의 對中 채무 일부의 상환 연기가 합의되었다.

1995년 러시아의 외무, 국방, 내무, 핵공업부장관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특히 그라초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군고위 사절단 방중시(5.15~20)에는 양국 국경지대 군장비·병력의 상호 감축과 군사방위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구소련 붕괴이후

최초로 루가노프 러시아 共産黨 중앙위 의장이 중국을 방문(5.30~6.5)하여 양국 공산당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러간의 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교환방문과 군사 교류 확대는 양국간 信賴關係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러시아내 민족주의 세력의 확대로 인해 당초 비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西部國境線協定이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10.17)됨으로써 중·러간 영토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이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첨단 軍事武器·裝備의 중국 반입 추세는 1995년에도 지속되었다. 1993년 이래 50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바 있는 중국은 동남아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킬로급 공격 디젤잠수함 4척을 러시아로부터 구입(1월)하였다. 또한 중국은 1995년 7차에 걸친 군사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SU-27 등 최신편 전투기들의 라이선스 생산과 미그 29와 미그 30의 중간형인 殲 10 전투기의 합작생산문제를 협의했으며, 「군사기술협력협정」을 체결(12.6)했다.

중·러간 정치·군사부문의 관계증진 추세는 양국간 經濟關係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7월말까지 중·러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약 5% 증가된 27억달러로서 중국은 러시아의 2대 교역국이 되었다. 중·러간에는 중국의 소비재와 러시아의 기술제품 교환이 주종을 이루는 교역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러간 경제적 상호 補完性和 러시아의 소비재난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996년 러시아의 大選 이전에 옐친이 국내정치 위상 제고를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미국의 對中政策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치·안보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996년 상반기 중·러간에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民族主義 성향을 가진 候補者가 당선될 경우 중·러간 관계발전 추세는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군사기술 협력협정」을 통해 군사무기 거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탕 위에 1996년에도 양국간 군사무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 東北亞 安保環境

전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적 변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冷戰的 舊態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 정세는 전세계적 차원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추세와 같은 맥락에서 脫冷戰的 양자관계의 재조정,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危機와 葛藤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安定과 不安定」이라는 양면성은 두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利害關係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둘째,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冷戰的 對立要因이 상존하고 있고, 한반도 分斷 등 냉전시대의 遺産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美·러의 독점적 영향력 감소와 일·중의 영향력 확대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既得權 상실을 원하지 않으나 세계정세의 긴장완화, 경제력 약화 등으로 동북아전략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기존 동맹체제 유지, 중국·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唯一 超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均衡者 役割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日本은 PKO 법안 통과후 自衛隊의 해외 파병,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 주장 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

的 役割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미·러의 영향력 약화, 특히 미국의 동북아정책 조정에 따라 동북아주둔 미군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미국과의 기존 정치·군사·경제관계 조정, 중국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中國은 1992년 이후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책으로 설정하여 實用主義外交·全方位外交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全方位外交를 통해 동북아 국제환경 속에서 미·러의 영향력 감소를 自國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고,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을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증대와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교차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현실은 1996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 핵문제이다.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과 KEDO-북한

간 경수로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의혹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을 완화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軍備競爭問題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 국가들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위해 「제2차 新中期 방위력 정비계획」(’91~’95)에 따라 1995년에도 前進防禦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신방위계획대강」을 확정(11.28)하여 방위력 향상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1995년 군사비를 전년대비 약 15% 증액하여 신무기개발, 러시아제 첨단 무기·기술 도입, 지하핵실험(5.15, 8.17) 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1995년 7~8월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도 1996년부터 대공·대함 공격력 증강 일환으로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2000 등 신형 전투기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領土·國境紛爭問題이다. 일·러간 북방영토 문제, 중·일간 尖角列島 문제, 한·중·일간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경계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요인으로서 당사국 및 주변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넷째, 지역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이다. 특히 대선('96.6)을 앞두고 권력구조 변동기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공산당 및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어서 대내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에도 鄧小平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96년에는 권력승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완전히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다섯째, 經濟問題이다. 역내 국가간 교역중대 등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1996년에도 미·일, 미·중, 일·중, 한·미, 한·일간 통상마찰이 역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력균형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지역 불안정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신뢰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도 이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도 소련 시대 이래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역내 국가들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통해 역내 불안정

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동 기구의 창설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의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동 기구를 역내 진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신장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場으로서 또는 상대방의 과도한 정치·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과 雙務的 同盟體制를 유지하는 기초위에서 域內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多者間 安保協力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미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東北亞 安保環境의 변화추세 속에서 周邊 4國은 한반도문제로 인하여 地域秩序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국은 남북한 간 關係改善을 통해 한반도의 緊張局面이 解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등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확대 競爭을 지속하고 있다. 미, 일, 중, 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199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北韓 核問題 해결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共助體制를 유지해 왔으나, 양국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葛藤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미합의문 이행과정에서 한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의 並行推進 원칙을 견지하였다. 또한 한·미는 일본과 공동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발족(3.9)시키고, 한국형 경수로 공급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켈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회담(5.19~6.12)에서 북한에게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용을 촉구하였다.

한·미는 頂上會談(7.25)에서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召集하기로 합의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對美 平和協定 체결주장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7.26)에서도 북한내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등 북·미관계 개선 문제가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軍事·安保面에서도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전략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同盟關係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2.27)하였다.

한·미 國防長官은 북한의 군사위협과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간 군사동맹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장기 안보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9.2)하였다. 또한 한·미는 제27차 안보협의회(11.2~3)에서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의 신속배치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經濟部門에 있어서는 시장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 등과 관련하여 마찰이 야기되었다. 미국은 1995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不公正 貿易慣行을 비난(3.31)하면서 한국의 금융·자본·유통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수입 농산물 검역 완화와 자동차관세율의 인하를 요구(9.19)하였다.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조치와 제13차 한·미연례경제협의회 개최(11.22) 등을 계기로 1995년 하반기에 들어 한·미간 市場開放問題와 관련한 마찰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등 미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1996년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1996년에도 한·미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확정문제 등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共助體制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경수로 비용분담문제,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한국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가 감리기능만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감리 이외 사업감독도 PC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 韓·日關係

1995년도 한·일관계는 무라야마 일본 총리(10.18)와 에토 총무처 장관의 한반도 식민지정책 美化 발언(11.10)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고노 외무장관의 사죄 방문 거부와 한·일 정상회담의 취소 사태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앞서 대북한 쌀지원 협상을 타결(6.29, 10.4)지으려한 점도 한·일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은 에토(江藤) 총무처장관의 사임과 오사카 아·태경제협력체 指導者會議時 개최된 정상회담(11.18)을 계기로 다소 진정되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사죄하며, 잘못된 過去事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고 약

속하였다. 이와 관련, 한·일은 양국간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공동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시 對北修交 3원칙을 제시(11.18)하여 한국과의 마찰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무라야마는 ①대북수교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일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전제위에서 추진하고, ②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③수교전에 경제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운영 및 분담금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였으며, 한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國 진출 지지요청(4.15)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태도(4.16)를 표명하였다. 특히 니시모토 일본 統合幕僚長이 한국을 방문(2.23~26)하여 한국군 고위관계자와 국방교류 확대를 협의하고, 김태지 주일대사도 에토(衛藤) 방위청장관과 양국간 공식 군사교류 추진을 협의(9.20)하는 등 한·일간 안보협력 증진 노력이 확대되었다.

1996년에도 한·일간에는 政治·安保·經濟分野에서 대체적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사안에서는 異見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일본이 自衛隊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방위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북 수교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본내 保守化 경향을 감안할 때, 과거사 문제는 1996년에도 한·일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韓·中關係

1995년 한·중관계는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4.17~22), 이홍구 국무총리의 방중(5.9~15), 江澤民 주석의 방한(11.13~17) 및 황락주 국회의장의 방중(12.21~28) 등 고위 지도자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기존의 경제위주의 관계에서 정치·안보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특히 수교 3년째를 맞이하여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訪韓이 성사됨으로써 한·중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공히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중간에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초보적이거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 모색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가시화 되게 되었다.

喬石 全人大 상무위원장 방한시 한·중 양국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停戰體制 전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이홍구 총리 방중시 중국은 한국에게 「특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의하였다. 또한 江澤民 주석의 방한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趙成台 국방부 정책실장이 중국을 방문(2.20~23)하여 중국군 고위 지도부와 접촉, 군 인사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하였으며, 한·중간 아주국장회의(3.13)가 열려 쌍무 안보

문제와 동북아 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平和協定 締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반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江澤民 주석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 정전체제가 유효하며, 평화체제 전환이 남북한과 미, 중 등 관련 당사국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軍事同盟條約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陳健 중국의교부 대변인은 “중·북간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은 파병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11.14)는 바,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威脅認識을 감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5년 한·중간에는 國際舞臺에서의 협력 무드가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중 인권 규탄 결의안에 반대(3.8)하였고, 李登輝 대만 총통 訪美 이후 악화된 미·중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재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안승운목사 납치 사건, 瀋陽 총영사관 개설문제 및 어로

수역 확정문제 등은 한·중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정치·안보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조선족문제도 한·중간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이 되었다. 李鵬 총리는 이홍구 총리 방중시 조선족에 대한 親韓化 정책을 자제하도록 공식 요청(5.10)하였다.

인적·물적 교류·접촉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한·중간 經濟關係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1년 동안 5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 345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1.13)하였다. 1994년 117억달러를 기록하였던 한·중간 交易規模가 1995년에는 150억달러를 초과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도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 투자액이 17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투자 양태도 과거와는 달리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은 「경제공동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을 발전·제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江澤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은 중형항공기 공동 개발 착수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및 러시아 가스전 개발에 공동 진출 등을 약속함으로써 이미 산업협력 단계

로 진입된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오사카 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서 市場開放에 대한 유예조치가 허용되도록 협력하였다.

경제적 상호 依存度 심화 추세를 감안할 때, 1996년에도 중국내 정치상황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한·중간 經濟交流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山東省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중형항공기 합작생산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이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중간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경우 1996년 한·중간에는 정치·안보 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을 카드로 활용하여 북한의 對미·일 관계개선 속도를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가입도 한·중간 정치·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 韓·러關係

한·러 양국은 러시아 정부의 「朝·蘇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폐기통보(9.7)와 소련에 제공된 經協借款 일부의 현물상환 합의 등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同伴者關係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그동안 정치분야에 차중되었던 양국관계가 안보·군사와 경제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安保·軍事面에서 한·러는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쌍무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기수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최신 군사무기와 첨단 장비의 라이선스 생산을 한국에 제의하고 있다. 미·일의 對북한 관계개선 움직임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유지 노력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한(5.19~21)은 한·러 軍事關係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러 국방장관은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96~'97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防産技術의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관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 가서명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방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한·중 안보관계 증진 추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러시아의 개입 여지 확보를 위해 북·미 平和協定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한·러간 經濟交流는 증대되고 있으며, 차관상환 문제가 부분적으로 타결됨으로써 經協擴大를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5년 한·러간 교역량은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서가 교환·발효(8.24)되었다. 한·러는 1993년 말까지의 연체원리금과 이자 4억 5,070만 달러중 반은 무기로 상환하고 잔액은 원자재와 민용헬기로 상환하기로 합의(7.10)하였으며, 1994년 이후분은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借款 일부를 전차와 휴대용 대전차 유도미사일 및 대공미사일 등으로 상환받게 되었다.

한·러는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방한(9.27~29)을 계기로 정치, 경제, 외교적 協力增進 方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무역·경제 및 과학 기술협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모스크바 시내 한국무역센터 건립, 나훗카 자유경제지대에 한국공단 조성,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등 共同協力 事業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사할린 한인 1세의 영주귀국 문제를 한·일·러 3국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연해주 하산지역 합작 쌀농사 의향서」(5.26)에 따라 러시아는 농지를 제공하고 한국은 농기계와 종자 등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大使館 敷地의 상호교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한·러는 실무협상을 통해 한국이 제정러시아 公館敷地를 1,500만~2,000만 달러선에서 보상하고 러시아는 크렘린궁 부근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7.12)하였다.

이와 같이 1995년 한·러간에는 「朝·蘇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폐기, 경험차관 상환 및 公館敷地 문제 등 주요 懸案들이 해결되었으며, 안보·군사·경제면에서 협력이 강화되었다. 1995년 12월 總選과 1996년 6월 大選으로 인하여 향후 러시아 政局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회복추세와 러시아의 개혁 지속 가능성을 감안 할 때, 한·러간에는 안보·군사·경제면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北韓情勢

1. 對內情勢

가. 權力承繼

1995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문제는 김정일의 공식승계 여부였다. 公式承繼가 遲延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평양방송(1.15)은 그 이유를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김정일의 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계지연의 실질적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있거나, 또는 대미·일 관계개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문제 해소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승계 시기를 미루면서도 承繼準備를 위한 象徵操作을 계속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정일 53회 생일행사(2.16), 국방위원장 추대 2주년(4.9), 원수칭호 3주년(4.20), 당사업 시작 31주년(6.19),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12.24) 등 김정일 관련 행사를 대규모로 치루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사 때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동일시되었으며, 그에 대한 충성심 촉구가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김정일이 아직도 노동당 총비서직과 주석직을 공식 승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權力行使 방식은 제3세계의 비상체제화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그가 줄곧 최고사령관 또는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노동당 창건 50주년(10.10)을 즈음하여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명의(10.8)로 최광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고 「최고사령관 명령 제65호」(10.8)에 의하여 14명의 장령급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최고 군사지휘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였다.¹⁾ 그리고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 행사의 주석단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신임 인민무력부장의 보고를 받고 열병식을 참관하였다.

이같은 김정일의 권력행사 방식은 상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위기관리시의 大權行使인 동시에 超憲法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의 사용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13조)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사령관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며 무력에 대한 통솔

1) 단, 최광과 이을설에 대한 원수칭호와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에 대한 차수 칭호 수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도 최고사령관이 아닌 국방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또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권력행사가 군사적 지휘권을 통해 體制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그는 軍部의 支持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또한 왕성하게 펼쳤다. 김정일은 신년초(1.1) 214군부대를 방문한 이래 인민군 중대장·중대 정치지도원 대회 참여(3.15~6), 해군 853부대 방문(6.16),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 참가 장병 위로(7.18), 인민군 훈련일꾼회의 참가자 접견(8.6), 당 창건 5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10.10) 등 10여 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군관련 행사에 참여했다.

1996년은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보완하는 緩衝期間이 종료되는 해인 동시에, 경수로 회담 및 대미·일 관계 등의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설 수 있는 해이다. 완충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취나 대외관계상의 치적들이 김정일의 公式承繼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은 딜레마에 놓여있다. 설사 대외관계의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와 같은 완충기 과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外問題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북한은 1996년 말 혹은 1997년에 經濟回生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당대회를 통하여 김정일의 權力承繼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나. 政策路線

북한은 김일성 사망('94.7.8)이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政策路線에 전혀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한 해동안 추진할 과업과 계획을 제시해 왔으나, 1995년에는 이례적으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통해 (1.1) 김일성의 정책노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國際潮流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립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1995년 한 해 동안 발표한 네 편의 論文, “재일 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5.2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0.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이다”(12.25)에서도 김일성의 위업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였을 뿐 對內外 政策變化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변함없이 해외교포조직의 결속, 사상사업의 중요성, 김일성 혁명사상의 계승·발전, 김일성 유훈관철,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 주체사상의 순결성 고수 및 외부사조의 침습방지, 부정부패 반대투쟁, 그리고 당의 통

일·단결 등을 강조하였다.

당창건 5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281개의 口號(5.1)도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구하였을 뿐 새로운 정책이나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구호의 주요 내용이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시조”, “김일성이 곧 김정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방지를 위한 모기장을 든 든히 칠 것”, “자체의 힘으로 郡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할 것”, “반제 자주역량의 단결” 등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1주년 행사인 중앙추모대회(7.7)와 금수산 기념궁전²⁾ 개관식(7.8)을 통해서 북한 사회주의의 미래가 김일성의 유산에 바탕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위의 기념식에서 보고자들은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기본 슬로건으로 내세워 김일성의 ‘위업’을 기리는 동시에 그의 노선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 經濟動向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5년 연속 후퇴했다. 1993년에

2) 김일성 사망 1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개칭하고 여기에 김일성 시신을 안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서(6.12)를 채택한 바 있다.

비해 1994년의 마이너스 성장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북한경제는 여전히 후퇴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의 국민총생산(경상GNP)과 1인당 GNP는 각각 212억 달러, 923달러로 1993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실질경제성장률

	1990	1991	1992	1993	1994
경상GNP(억달러)	231	229	211	205	212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실질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자료: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5.6).

1995년도 북한의 經濟政策은 (1)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93.12.8)에서 제시된 완충기 과업으로서의 3대 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며, (2) 「선행부문」(전력·석탄·철도운수)과 금속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동원하여 연료·동력 및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3)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군(郡)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군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침하에 북한은 1995년도의 생산목표를 당창건 50주년 기념일(10.10) 이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력경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경제관리지도층의 해이해

진 사회주의적 사상을 재무장시키기 위해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3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2.7)를 개최하였다.³⁾ 이 보고회에서는 부정부패 해소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경제조직체계와 질서를 위협할 만큼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일탈행위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經濟難을 타개하여 경제를 회생시킬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 실현을 명분으로 緩衝期 경제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1995년도 상반기 중 최고인민회의(제9기 8차)를 개최하지 않아 1995년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운용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원인 선행부문의 부진이 계속되어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3차례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엔평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수해 피해정도를 약 10만 가구의 이재민 발생, 약 190만톤의 곡물유실, 상당수의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 시설의 파괴로 추계하고 수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1995/96년도 북한의 食糧難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3)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기념보고회는 1980년 이래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온 정례행사로서 처음에는 김일성 현지도도 기념보고회 형식으로 열렸으나, 1990년 제30주년 행사를 계기로 중앙보고회로 행사규모가 확대되었다.

다. 북한의 필요곡물량은 763만 9천톤인데⁴⁾, 구조적 문제 때문에 197만 4천톤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수해로 인해 곡물 수확 감소분 190만 1천톤이 생겨 곡물의 해외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 부족분은 387만 5천톤으로 필요곡물량의 절반 정도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1995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쌀 15만톤, 일본에서 쌀 50만톤, 태국에서 쌀 30만톤, 중국에서 곡물 10만톤, 미국 바틀렛사로부터 옥수수 5만 4천톤 등 총 110만톤의 곡물을 해외로부터 확보하였다. 지금까지 확보된 곡물량을 감안하더라도 1995/96년 북한의 곡물 순부족량은 약 27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어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곡물량의 35%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무역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1.1억 달러로 1993년도의 26.4억 달러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1995년도 상반기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대외무역을 1994년同期와 비교하면, 일본 및 프랑스와의 교역량은 증가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독일 등과의 교역량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교역량으로 본 상위 6개국(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홍콩, 프랑스)과의

4) 이 수치는 유엔평가단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당국의 발표내용에 따른 것으로 식용 486만 9천톤, 산업용 120만톤, 가축용 140만톤으로 되어 있다.

교역총액은 전년도 상반기의 6억 7,772만 달러에서 6억 4,074만 달러로 줄어들었다.⁵⁾

<표 2>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교역규모	47.2	27.2	26.6	26.4	21.1
수 출	19.6	10.1	10.2	10.2	8.4
수 입	27.6	17.1	16.4	16.2	12.7

자료: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5. 6).

이처럼 對外貿易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북한간 物資交易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94년 남북한의 물자교역액은 통관기준으로 1억 9,455만 달러였으나 1995년에는 9월까지 2억 2,595만 달러를 넘어서 연말까지는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간 물자교역이 비록 간접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經濟難 타개를 위한 대외경제개방과 외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1995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1995. 11).

년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2.22), 「보험법」(4.6),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6.28), 「합영법시행규정」(7.13),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입자 대리업무규정」(7.13) 등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상반기 중 철조망 설치(40km)와 나진호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나진-훈춘간 광케이블 부설공사와 나진 국제통신센터의 기초공사, 공업용수 공급용 후창저수지 저수능력 확장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은 식량과 에너지 등 고갈된 자원의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와 대만, 독일, 중국 등지에서의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서방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도입 및 외자유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는 낮은 대외신용도와 투자여건의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1996년에도 북한경제는 예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미·일 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현재의 침체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라. 社會動向 및 人權實態

1995년 김일성없는 첫 해를 맞이한 북한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의 부재,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사회통제력이 다소 이완되었고 부정부패와 암거래, 사회일탈현상이 계속되었다.

신분과 사상·성분에 따라 주민을 차별대우하는 엄격한 계급정책의 실시로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김정일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세도와 부정부패로 일반주민들과 간부들간의 불신은 오히려 증폭되어 사회적 응집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시대를 풍미했던 투쟁일변도의 兵營文化 속에서 생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프로스포츠를 허용하고 전통명절을 복원하는 등 문화생활 공간을 다소 확대하였으나, 정치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억압적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94년 7월 국제사면위가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이후 95년 한 해 동안 북한은 국제적인 인권압력에 직면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산하의 프랑스, 독일, 필리핀 등 13개국의 50개 인권단체는 북한에 서한을 보내(1월 중순) 북송교포 및 북송 일본인처들의 인권회복을 촉구하였고, 「노르웨이 엠네스티 그룹30」도 김정일에게 직접 보낸 서한(1월 중순)을 통해 북송

교포 조호평씨 가족의 행방 확인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국제사면 위원회는 「평양문화축전」기간(4.28~30) 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현재 북한에는 3곳의 강제수용소에 반국가사범 240명을 포함, 8백~1천여 명의 양심수가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으로부터 확인하였다.

한편, 경제난의 심화로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한 동시에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물품을 빼내어 부정을 자행하는 등 사회경제질서 문란행위가 늘어났다. 농촌에서 터밭을 이용한 소위 개인농과 도시직장인들의 장사는 이제 보편적 현상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시장, 물물교환, 보따리장사와 같은 사적 영역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의식 속에 돈과 물질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절취, 줌독 등 개인주의적 일탈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탈행위는 체제이탈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95년 9월까지 농업과학원 연구원 이민복씨(2월)와 북송교포 오수룡씨 일가족(3.26), 박철만씨(3.26), 인민무력부 최주환 상좌(9월말) 등 39명이 남한으로 귀순하였다. 이는 이완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한 단면이다.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재의 북한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에서 정보접촉과 자유를 경험한 북한주민의 탈북 또는 남한귀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 7~8월의 수해 등으로 외부세계

의 도움을 받지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북한내에 남한의 발전상과 외국관련 정보가 유입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평양문화축전」(4.28~30) 동안 북한주민들은 미국·일본 가수들의 팝송과 외국인·해외교포들이 보여주는 자유로움, 풍요로움을 접하면서 상당한 ‘문화충격’을 경험하였고 수해지원 물자를 통해 외부세계와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당장 북한의 사회통합을 이완시키지는 않을지라도 비교 및 비판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각종 궤기대회, 사상교양강좌, 김일성 추모행사 등을 통해 체제결속을 촉구하는 한편, 법제화와 주민통제를 통해 개방에 따른 자본주의 사조 유입을 차단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은 개방의 가속화와 더불어 유입되는 서구 민주주의적 가치나 자유화의 바람에 청소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경각심과 투쟁심을 고취시키는 사상교육에 주력하였다. 사로청 창립 49주년 기념집회(1.17), 김일성의 「광복의 천리길 행군」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1.22),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2.16) 등 각종 집회에서 청소년들을 전사회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들의 결의를 잇따라 가졌고 청소년층에게 「전시가요」를 보급하는 운동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2.7)하고 281개에 달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

표(5.1)하는 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결속과 사회주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추모대회(7.7)와 이 행사를 전후해 열린 영화관람(6.27~7.11), 전시회(6월말~9월중순까지 각 지역), 연구토론회 및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7.8)을 통해 고조된 김일성 추모열기에 편승하여 “김정일은 오늘의 김일성”이라는 구호하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교양 강화와 체제단결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나진·선봉특구 및 경수로 건설 추진 등에 따라 예상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이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대미·일 관계개선에 대비한 남한주적론을 「민민전」, 「범민련」 등 각종 언론 및 사회단체를 통해 확산시키면서 주민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1996년에도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적 사고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대내적 파급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사상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러 국경지역과 나진·선봉특구에 대한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외래사조 및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육에 주력할 것이다. 대내적인 사상교양과 사회통제의 강화에는 군사적 위기의식과 대남 적대감이 최대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이나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조직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마. 軍事動向

북한은 김일성 死亡과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94.10.21) 이후에도 “1995년은 전쟁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해”임을 강조하면서 지하시설 보강, 예비물자 확보 등 새로운 ‘戰時 動員計劃’의 완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즉 북한은 3개년 戰時動員計劃('91~'93)의 목표 가운데 인력동원 및 물자의 생산·비축·동원 등과 같은 미달성 분야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군부대의 훈련을 적극 강화해 왔으나, 경제난 때문에 자원절약형 위주의 축소된 교육훈련 밖에 실시할 수 없어 그 성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귀순자들도 교육훈련 내용이 부실하고 수준 역시 저조한 것으로 傳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1995년에도 계속되었다. 미사일 및 장거리포, 소형 잠수함 및 상륙정, AN2機 및 헬기 등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수도권과 중심 군사시설은 북한의 가중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은 군사력 증강은 단시간내 남한의 주요 거점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로서, 이는 북한이 기습마비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군의 위상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김정일의 노력에서도 입증된다. 그는 금년들어 10여 차례의 군관련 행사에 참석했으며 軍要職의 인사를 단행했다.⁶⁾

대외군사협력 측면에서는 과거 최대 군사지원 국가였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9월 러시아가 북·러간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대한 폐기의사를 평양에 전달함으로써 34년간 지속되어 온 북·러간의 군사동맹체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북한은 아시아지역 제3세계국가와의 활발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최광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 일행 14명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4.2~8)하여 군고위층을 면담하고 방위산업부문 기술협력 등 군사교류·협력을 강구하였다. 1994년에 이은 동남아국가들과의 군사교류·협력 증진 노력은 방위산업수출을 통한 구상 무역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남군사관계와 관련,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94.4.28)한 이래 정전협정 파기와 관련한 주기적인 성명 발표, 북측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강제철수 및

6) 예를 들면 최광과 이을설이 원수로 승진하여 각각 인민무력부장과 호위총국장에 임명되었다.

폐쇄(5.3), 공동경비구역내 북한군 무장병력 투입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현 정전체제의 효력상실을 행동으로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군사접촉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199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體制維持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승계체제 구축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내적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외적 위협을 구실로 전쟁준비 태세를 강조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의도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통해 미국과의 장성급 대화를 요구하고 북·미평화협정체제의 구축을 유도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主要 對外動向

가. 北·美關係

1995년 북·미관계는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 회담과 북한수재 지원, 양국 민간인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보다 진일보하였다. 특히 양국 政府間 關係는 큰 마찰없이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와 미국 선박 북한항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1.9)하였고 미국도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에 걸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발표(1.20)하였다.

그리고 美 財務部는 애드미럴 줘월드 자문회사와 스탠턴 그룹에게 대북한 경제활동사업을 허가(2.10)하는 한편, 해외자산규제령을 개정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인적 교류, 북한상품의 반입,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제공에서의 미국기업의 참여, 북한 언론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2.14). 뿐만 아니라 이의 연장선상에서 美재무부는 미국 광물거래사인 코메탈사에게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사업허가서를 발부(4.17)하였고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북·미간 직통전화 개설을 허용(3.29)하였다.

정치적 관계를 보면 양국은 경수로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경수로전문가회담(1차 '94.11 북경; 2차 '95.1 베를린; 3차 '95.3 베를린; 4차 '95.4 베를린) 및 북·미 준고위급회담(팔라룸푸르, '95.5)을 개최하고,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공동언론 발표문으로 공표(6.13)하였다. 북·미 준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유지, 사용후 핵연료봉의 처리, 대북중유제공 등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합의되었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북·미 專門家會談(1차 '94.12.6~10 워싱턴; 2차 '95.1.31.~2.3 평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9.29) 미국이 駐북한 舊동독대사관을 연락사무소 건물로 사용키로 하였

다. 연락사무소 개설시점과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여부를 전제조건화하지는 않았다. 갈루치대사는 “남북대화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말해(10.20)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관없이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국정부는 북한의 水害復舊를 위해 2만5천 달러를 지원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9.7)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키로 결정(10.25)하였다.

이처럼 政府間 對話는 활발했던 한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美의회는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미의회는 수차에 걸친 결의를 통해 북한 핵의혹 해소를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화하도록 정부에 요구(1.24)하였고, 북한에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한 핵처리시설 즉각 해체, 남북한 상호 핵사찰,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공동위 사무소 설치, 남북한 무역 및 여행 자유 확대 등을 촉구(1.25)하였다. 또한 미하원 아·태소위는 한국이 경수로제공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의안을 채택(4.5)하였고, 하원 세추소위도 경수로 건설 지원금 가운데 9백만 달러를 삭감하였다(6.8).

1995년 하반기에도 미하원은 남북대화 재개, 비핵화선언 이행의 진전이 없을 경우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관계 격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의(9.18)하였고 상원도 북한이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11.9)하였다.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결의안 발효 90일후 현 남북관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뒤 6개월 마다 같은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미간 民間交流는 활발하였다. 특히 종교관련 접촉이 빈번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재철 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종교인 및 학자 대표단이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2.7)하였고, 전경남 해외동포원호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종교·예술대표단도 6월 26일부터 1개월간 L.A., 시카고 등 7개시를 방문,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또한 美퀘이커교 종교재단의 초청으로 「세계인민연대를 위한 조선위원회」 허섭 부회장이 유길웅, 동경철 등 前외교부관리들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11.14)하였다.

정부간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문화계 인사들의 상호 방문회수도 많아졌다. 코메탈사는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광물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으로의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2.4), 줌월트 前국무부인권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기업대표단은 상업거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2.11)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 외에도 스텐턴그룹 기술자 5명(3.18), 존슨 CNN방송 사장(5.23), 골드마크 미룩펠러재단 회장 및 스칼라피노 아시아재단 이사(7.19) 등이 북

한을 방문하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상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5.29)한데 이어, 오태봉 조선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실무대표단이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6.4)하였다. 또한 북한외교부 산하 軍縮平和研究所의 김병홍 소장과 김을 연구실장 등이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세미나(11.15~19)에 참석하였다.

한편 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정책도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 미네랄 테크놀로지사는 북한과 수만톤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6.10)하였고 셀퍼시픽사도 북한 經濟特區에 석유저장 및 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6.19). 또한 임용근 오레곤주 상원의원은 오레곤주-북한간 경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8.3)하였고 스탠턴그룹 대표단도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해 현지 원유가공공장 확장문제를 논의(10.28)하였다.

1996년 북·미간에는 KEDO를 통한 경수로지원문제 외에는 큰 爭點이 없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 재개를 굳이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탄력성있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의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의 대북무역금수 조치는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의 북한진출은 회수와 규모면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양국 의 민간교류도 증대될 것이다.

1996년에도 미의회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의회의 압력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관계 개선에 신중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나. 北·中關係

대외 고립과 대내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과 友好關係를 유지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변경국인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북·중관계는 이념적 유대보다는 經濟的 實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1995년 북·중관계는 1994년에 비해 소원해졌다. 李鵬 중국 총리의 방한('94.11), 평양축전(4.28~29) 기간

중 평양-타이베이간 전세기 운항 및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 선정시 북한의 대만지지 입장, 「로동신문」北京특파원에 대한 중국의 추방 결정, 江澤民主석의 방한(11.13~17) 등이 북·중관계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양국 주요 인사들의 상호 교환방문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초 김병식 국가 부주석겸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訪中(1.29~31)한 데 이어,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일행(2.25~27)과 이희규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3.28~4.6)하였다.

중국측에서는 徐清 당 기율검사위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공산당 대표단(6.7~14)과 唐家璇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외교부 친선대표단(6.7~13)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군 참관단 등 3개의 중국 대표단 방북(9.20) 등 9월 들어 중국대표단의 방북 회수가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노동당 창건 50주년(10.10)을 계기로 당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중간 경제적 관계도 1994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초 김복신 북한 부총리의 북·중 경제·무역공동위원회 참석차 이루어진 訪中(1.26~28)을 비롯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방문(4.8) 등을 통해 북한은 대중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黑龍江

省 등 중국 지방정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22), 쌀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1993년 이래 중국으로부터 화학 비료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19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7억 달러로 前年同期 對比 19.1%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前年同期比 70.1% 감소한 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은 7.5%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5년 상반기 양국간 무역실적을 감안할 때, 1995년 총 교역규모는 전년도의 6.2억 달러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 측면을 보면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정각 상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10.21~27)하였으며, 중국측에서도 廣州軍區 사령관 史玉孝 등 군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군사 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4주년(7.11)을 맞아 쌍방간의 친선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으며, 江澤民은 방한 직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중간 군사동맹조약을 파기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도 북한은 대내 경제난과 대외 고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필

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북한의 대미·일 경사 가능성을 저지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공식 승계할 경우 江澤民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국 지도부 세대교체와 국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북·중관계가 과거와 같은 血盟關係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北·日關係

1995년의 북·일관계는 修交會談의 재개를 위한 접촉,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過去清算 문제, 일본의 대북 쌀 지원,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양국간의 공방 등으로 집약된다.

정치적 관계에서 볼 때 1995년은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3.30)와 일본의 대북 쌀지원으로 양국이 2년 여의 냉각상태에서 벗어나 활발한 접촉을 보인 한 해였다. 그러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서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양국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修交問題의 경우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일본 연립3당과 북한 노동당은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일은 1995년 한 해 동안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일본의 補償問題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은 일본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과거청산'이 국교정상화의 前提條件이라고 주장(9.28, 10.12)했다. 북한이 '과거청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의는 보상문제에서 일본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망언 등 일본내 보수우익화 경향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이 최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카드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북한은 일본정부가 발표(6.14)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 기금 창설계획'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일본의 過去罪行에 대한 인정 및 진상 공개와 함께 민간기금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7.1)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 여론 조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7.26).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북·일관계에서 주목을 끈 또 하나의 사안은 일본의 대북 쌀지원이다. 북한은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訪日하여

가진 연립여당 방북단 대표들과의 회담(5.26)에서 쌀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게 모두 5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약속(6.30, 10.3)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5년에도 일본이 核武器를 개발하고 있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非難攻勢(7.28)를 계속하였다. 북한의 대일비난은 일본이 「95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공세는 일본의 핵문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핵문제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布石으로 판단된다.

1995년 상반기 북한의 對日貿易 총액은 2.4억 달러로 前年同期 對比 14.6%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일수출은 1.4억 달러로 前年同期比 7.8% 늘었으며 수입은 1.0억 달러로 前年同期比 25.0%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前年同期의 3,930만 달러에서 3,293만 달러로 감소했다. 1995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규모는 최근의 상승세와 함께 하반기에는 쌍방간 무역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무역추세에 비추어 지난해의 4.9억 달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PEC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무라야마총리는 對北修交 3原則을 제시(11.19)했다. 무라야마총리가

밝힌 3원칙이란 북·일관계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교교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 아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북·일수교 이전에 일본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3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현재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도의시한다면 1996년에도 북·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라야마총리는 “지난번 일본의 대북 쌀지원은 특수한 예외적 조치였다”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수교이전까지는 독자적인 경제적 지원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의 교섭과정에 비추어 북·일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共助關係를 감안할 때 일본이 미국에 앞서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996년에도 북·미관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북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北·러關係

1995년 북·러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等距離外交와 상호간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基調위에서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였다. 북·러관계 강화요인으로서의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경학적 이해, 러시아의 대서방 견제 외교정책, 북·미 북·일 수교 가

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한 影響力 維持 노력, 한·러 경제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러시아 총선('95.12)과 대선('96.6)을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 보수파와 북한의 접촉 증가, 북·러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러간 葛藤要因으로는 북한 벌목공의 인권문제, 북한의 對러 채무상환문제, 러시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벌목공에 대한 1일 8시간 노동 및 여행 자유의 허용 등의 人權保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임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벌목공 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내에서 북한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마약거래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斷罪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1995년에도 북·러 貿易量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주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와 북한간의 經濟協力은 상호보완성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6년 9월10일에 만료되는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시사(9.13)함으로써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의 協力關係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북한과 러시아는 갈등의 해소와 상호간 경제적 實利追求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牽制 및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共感한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러관계는 김일성의 사망과 러시아의 체제변혁에 따른 이념적 연대감의 상실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脆弱性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당분간 현상유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 對南動向

1995년 북한은 남한내 학생·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연대적 통일투쟁 및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對南革命戰略을 구사한 반면, 한국정부에 쌀을 요청하는 등 이중적 대남전략을 견지하였다.

남한에서 대형사고 발생과 지방자치제 선거 등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內部分裂을 기도하였다. 「민민전」은 국가보안법 철폐, 콘크리트장벽 철거투쟁 등을 주장한 통일구국 선언을 발표(1.16)하고, 각계각층의 연대투쟁·공동투쟁 등 반정부투쟁을 촉구하였다. 또한 「직맹」, 「사로청」, 「농근맹」은 김일성 조문 불허 조치와 한국내 주요 社會懸案 및 社會犯罪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3.28)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도 그

어느 때 보다 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인신공격과 반정부투쟁 선동은 남한내부의 분열과 국민의 대정부불신을 유도하기 위한 대남교란전술이다.

1995년에도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입각한 통일을 촉구하면서 國家保安法 철폐주장을 되풀이하였다. 「한민전」 중앙위(1.19),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2.1), 「로동신문」(3.9~13)은 보안법을 “반민주·반민족·반통일 악법이자 파쇼독재자의 생존수단”으로 비난하면서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남한국민에게 안기부 해체 투쟁을 전개하도록 선동(2.28~3.4)하였다. 북한의 강도높은 보안법 철폐 주장은 “한국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노동운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 美國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2.1)에 고무된 듯하며, 또한 남북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대남전략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人權問題를 거론하면서 미출소공산주의자 문제를 인권탄압행위로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1.12, 10.2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3.17)는 김선명,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회색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국의 인권문제를 비난하면서도, 남북 우성호 선원의 송환 거부와 안승운 목사 납치(7.25) 등 非人道的 行爲를 자행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비무장지대안에서 발생한 남북한간 군사마찰을 김영삼 정권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전쟁책동으로 비난(2.22, 9.6)하고, 한국군의 군사장비 현대화와 軍事訓練을 북침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공격하였다. 북한은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국면을 일부 남한의 強硬勢力의 오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무장 정찰조 침투(10.17) 및 무장간첩 남파(10.24)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의 전쟁불사 입장 표명은 ‘한국형 경수로’ 채택 및 경수로 지원에서 남한의 중심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한국정부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굴엽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계획을 ‘환경파괴’, ‘방사능 전쟁포고’, ‘핵공세’ 등으로 매도하면서 남북합의서의 전면 무효화는 물론 강경한 對應措置를 취할 것이라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하에 경수로를 건설하려는데 반해 남한은 핵개발을 기도하고 있다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북한은 연초부터 統一戰線戰術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개최(1.24)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조국해방 50주년을 맞아 ‘8.15 통일대축전’

과 남북 정부당국,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들이 참석하는 ‘대민족회의’를 열어 민족공동의 과제와 통일방도, 민족대단결 실천 대책을 협의·확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 실현을 위해 김병식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2.1) 그리고 「조국전선」 중앙위가 민자당, 신민당, 새한국당에 정당간의 접촉을,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에게 대표접촉을 제의(2.21)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국전선」, 「사로청」, 「천주교인협회」, 「불교도연맹」 등 북한단체들은 「경실련」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등 남한의 39개 단체에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해 평양·서울·판문점·제3국 어디서든 접촉을 갖자는 서신제의를 하였다.

북한이 大民族會議 소집을 제의한 의도는 (1) 남한정권 타도 및 보안법 철폐 투쟁을 선동하고, (2)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승계와 연방제통일론 고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3) 北·美 제네바합의문에 명기된 남북대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4) 남북대화 중단과 경색국면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며, (5) 해외동포와 남한내 각계각층의 대북접촉 및 대화를 선동해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창구 일원화 정책을 무력화하고, (6) 정부와 국민간의 분열을 유도해 대북접근에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8.15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와 남북합의

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제의, ‘대북물자 공급’ 제의(3.7), 평양축전(4.28~30) 이산가족참관 요청 등을 내부 교란 술책이라는 구실로 거부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쌀제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北京會談시에도 의제를 쌀문제에 국한시키고 남북 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북한은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 담화(2.8)를 통해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2.27~3.1)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으나, 신변안전 보장문제와 정부의 개입을 구실로 불참하였다. 북한 불참의 근본적 이유는 회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접촉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염려한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 북한은 宗教團體를 대남혁명전략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美 L.A.에서의 남북종교인 접촉(6.26~29)과 광선회 목사의 방북(8.22) 허용은 그 대표적 사례로서, ‘인민외교’를 통해 핵문제로 야기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개천절 ‘단군추모제’ 행사에 남한 내 천도교와 대종교 등 종교계 인사를 초청했다.

경제면에서 북한은 쌍용, 삼성, 대우그룹 투자조사단의 방북을 허락하였으며, 특히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방북시 봉제공장 합작 설립 및 평양내 기업사무소 설치, 나진-선봉지역내 교회건립 등

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남북간 梗塞局面 지속 및 북한의 投資與件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하였다.

平和保障 문제와 관련, 북한은 연초 「중앙통신」(1.6)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남북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전술에 입각, 미국과의 敵對關係 청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6.13)하였다. 북한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들이 담보하는 ‘2+4’나 ‘2+2’ 방식의 평화구축안은 한반도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8.14)하는 등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북한의 전반적인 대남 敵對政策은 납북된 우성호의 생존 선원 5명과 사망자 3명의 遺骸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12.26)함으로써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송환은 유엔군측 관계자와 북한측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북한이 남한 당국자와의 관계를 기피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1996년에도 북한은 5.18 특별법 제정과 총선 등 政治懸案으로 한국내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內部分裂을 노리

는 반정부투쟁을 선동할 것이다. 동시에 '10대강령'과 '통일 3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장된 平和統一攻勢도 강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實益이 예상되는 민간차원의 교류에 제한적으로 응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평화보장체제수립,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협상 등에서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방식을 고수하여 가능한 한 남한을 배제시키려는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南北韓 關係

1. 輕水爐供給 協商과 北韓 核問題

가. 現況

(1) 輕水爐供給 協商

한·미·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협정문(3.9)에 「한국형 경수로」를 명기하고, 대북 輕水爐 지원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3.25~27)에서 韓國型 경수로의 수용을 거부했다. 제4차 경수로 전문가회담(4.12~14, 4.18~20)에서는 KEDO와의 공급협정 체결 용의와 한국의 제한적 참여 인정 등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 결과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결렬되었고, 대북 경수로공급협정은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목표시한(4.21)을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갈루치와 강석주간 제네바 高位級會談 제의(4.21)를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었다.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

과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개최된 콜라뎀푸르 준고위급회담(5.19~6.12)에서 합의된 사항중 다음 두가지는 특기할만하다. 첫째, 공동언론발표문에 한국형 경수로를 지칭하는 표현⁷⁾을 사용하여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둘째, KEDO가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 선정권을 갖는데 합의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주계약자 선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묵시적으로 수용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콜라뎀푸르 준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은 대체로 만족할만하다. 그러나 합의사항들은 기본 원칙만을 담고 있을 뿐이며, 세부이행단계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準高位級會談 타결 이후 KEDO 사무국의 개설(7.20)⁸⁾, 제1차 KEDO 총회의 개최(7.31~8.1), 3개 자문위원회(경수로사업, 대체 에너지 공급, 사용후연료봉 처리)의 구성으로 경수로 지원사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KEDO와 북한은 콜라뎀푸르에서 제1차 경수로 공급협상(9.11~15)을 개최했으며, 협상은 전체회의(9.11~13)와 실무급 전문가회의(9.13~15)로 나뉘어 진행되었다.⁹⁾ 한편

7) “KEDO가 노형선정권을 갖는다,” “두개의 냉각재 배관을 가진 1천 메가와트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 등의 표현을 말한다.

8) KEDO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미국), 사무차장 2인(한국, 일본), 사무차장 보좌관(미국) 등 소수인원으로 출발했는데, 1995년 말까지 25~30명 규모의 사무국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9) 북한의 허종과 KEDO의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사무총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KEDO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신포 해안지역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역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부지조사(1차: 8.15~22, 2차: 10.24~11.4)를 실시했다.

뉴욕에서 약 2개월 반(9.30~12.15)에 걸쳐 專門家會議 및 高位級會議로 진행된 제2차 공급협상은 供給範圍와 償還條件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공급협정문에 한국형 경수로가 직접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KEDO가 노형 선정권을 가지며, “일괄수주 방식의 1,000 MWe 급 가압경수로 2기”의 공급이 명시됨으로써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이 보다 명백하게 되었다.

(2) 附帶施設 및 費用償還

제3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이후 북한은 경수로 이외에 送配電網 등 부대시설의 추가건설을 요구하였다. 특히 제1차 경수로 공급협상에서 제시된 북한의 공급협정 초안에는 경수로 이외 10억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각종 附帶施設이 포함되었다.¹⁰⁾ 이처럼 공급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KEDO측의 “양해”를 적극적으

10) 북한이 요구한 것은 ①부지정리, ②도로·항만 등 경수로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하부구조, ③경수로 모의운전시설(시뮬레이터), ④송·배전시설 및 500kv용 송전선, ⑤설계도면, ⑥발전소 운전요원 훈련, ⑦5년간 운전이 필요한 보수·정비시설 일체, ⑧핵연료 공장, ⑨제1차 재장전 핵연료, ⑩기술서적 등이다.

로 희망했으나,¹¹⁾ KEDO는 경수로 건설의 일반적인 國際慣例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항만, 도로, 송·배전시설, 설계도면 등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¹²⁾

경수로 대금의 상환조건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수로 2기 완공후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흑연감속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상쇄해 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KEDO는 경수로 1기 완성후 거치기간 없이 15년 분할상환을 제시하였다. 제2차 경수로 공급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지나친 요구를 거두어 들였으며, 남한도 상환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양측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경수로공급 협정에서 KEDO는 북한이 요구하는 부대시설 가운데 경수로 건설에 필수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전 하부구조, 중·저준위 방사폐기물의 10년간 저장시설,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포괄적 훈련프로그램, 2년간 원전운영에 필요한 부품제공 등을 수용했다. 또한 상환조건과 관련, 북한의 입장이 충분히 고

11) 북한의 외교부대변인은 1995년 9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이 기존 원전산업 구축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고, KEDO가 경수로 건설 계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0월 21일 까지 미국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핵개발 계획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9월 18일 경수로 지원에서 한국이 국제관례나 상식선을 넘는 추가부담을 떠맡지 않을 것이며, 중유공급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려된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송·배전시설의 추가 지원은 제외되었다.

(3) 北韓 核活動 凍結 및 代替에너지 提供

IAEA는 대북사찰(9.12~19)을 통해 북한의 동결된 核施設(5MWe원자로 봉인, 50MWe 및 200MWe의 건설 중단, 방사화학 실험실 폐쇄, 핵연료제조시설 폐쇄)이 IAEA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同 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에 의한 사용후연료봉의 플루토늄양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IAEA가 사용후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IAEA 제39차 정기총회(9.22)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決議案을 채택(찬성 71개국, 기권 10개국)하는 동시에, 핵물질보유량에 대한 북한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총 8,100개에 달하는 사용후연료봉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술진은 6월말과 9월초의 방북을 통하여 안전보관방법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했다. 미국은 수조속 물의 화학처리 기술을 지원했으며 양국은 일단 건식방식으로 밀폐용기에 보관한 후, 경수

로 완공시 안전지역으로 이전·보관하기로 합의했다. 10월부터 건식보관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代替에너지 제공과 관련,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각 5만톤(합의문체결 후 3개월내 공급분)과 10만톤(10월까지의 공급분)의 중유가 제공되었다. 처음 5만톤과 2차분 10만 톤중 7만톤은 미국이, 나머지 3만톤은 KEDO가 그 비용을 부담했다.¹³⁾ 북한에 제공된 중유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대표단이 북한을 방문(6.18~23)하여 전용방지감시체제 설치에 관해 협의했다.¹⁴⁾

나. 展望 및 豫想問題點

(1) 輕水爐支援 事業

경수로공급 협정이 서명·발효됨으로써 향후 경수로지원 사업은 KEDO 부지조사단의 북한방문, KEDO와 주계약자간 상업계약 체결,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 선정, 주계약자와 하청업체들간 계약체결, KEDO와 북한간 協定履行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의

13) 1996년부터 1호 경수호가 건설될 때까지 매년 50만톤씩 제공될 중유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14) 갈루치 미핵대사는 6월 29일 회견에서 1995년 1월중 북한에 제공된 5만톤의 중유 가운데 20%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해석, PC의 역할과 위상, 費用算定과 각국의 負擔規模 등을 둘러싸고 남북한, 미국, 일본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비용부담이나 PC의 역할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남북한 및 한·일 간의 仲裁者的 役割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과 입지확보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비용분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경수로공급협정문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업관계자들에 대한 북한의 身邊保障 原則이 명시되어 있지만, 신변보장을 비롯하여 기술진과 건설인력, 각종 장비와 자재의 북한 반입 문제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영사보호·통관·통행·통신 등)를 구체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1996년 초부터 시작될 협정이행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협상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진과 인력의 방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2) 核凍結과 過去核疑惑 糾明

북한과 KEDO간 경수로공급협정의 체결에 따라 북한내 未凍結 核施設에 대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이 조만간에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核疑惑 解消問題는 상당기간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미 기본합의문에서 두 곳의 미 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경수로 핵심부품 반입 이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IAEA의 대북사찰(9.12~19)시 과거 핵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인 사용후연료봉의 플루토늄양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밀폐·보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핵 의혹 해소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용후연료봉에 대해서는 密閉·保管 작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북·미 기본합의문과 경수로공급협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연료봉의 제3국 이전은 경수로 핵심부품 반입 이후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 南北韓 對話

북한 핵問題와 북한의 북·미 平和協定 체결 주장 등으로 인하여 1995년에도 南北當局間 대화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한국정부는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연초 광복50주년 경축행사의 공동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회담을 북한에 제의(1.25)했다. 북한은 대민족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제의를 반통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거

부(1.27)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對話再開를 위해 4월 평양축전시 이산가족의 참관 및 가족상봉을 허용하자고 제의(2.3)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당국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이를 북·미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 재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2.4)했다.¹⁵⁾ 북한은 남한의 제안을 거부(2.6)하면서 북·미간 기본합의와 남북대화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2.9)했다.

남북한 和解 努力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3월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2.25)했으며, 宗教指導者 8인의 방북신청을 허가(5.3)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원은 국제선명회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2.6)했으며, 기업인 13인의 방북을 허가(3.13)하였다. 특히 남북대화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對話環境 조성을 위해 한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천명(6.15)하였는 바, 이는 1995년 전반기 한국정부의 對北政策이 능동적이고 신축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硬直性을 벗어나

15) 한국의 입장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진행절차가 남북대화 재개를 포함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 못했다. 남북대화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대북 경수로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의 수용거부는 북·미간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배제하고 남북대화 재개 압력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단군 추모행사 및 단군릉 참배'와 김일성 사망 1주기 기념을 구실로 남한측 인사를 초청¹⁷⁾하는 등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다. 나아가 안승운 목사 납치와 86우성호 선원 억류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은 한국정부의 對北 和解努力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북한의 쌀공급 요청으로 성사된 6월의 北京會談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대화에서 북한은 남북한간懸案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쌀공급 문제만을 다루고자했다. 특히 북한은 대표 전금철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시킴으로써 북경회담이 당국간 대화가 아닌 민간차원의

16)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전면백지화 한다는 입장(3.1)과 북·미간 제기되었던 정치협상이 경수로제공 협상타결 및 남북간 대화 재개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입장(4.21)을 밝혔다.

17) 북한의 초청에 대해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이 단군 추모행사 참여 및 단군릉 참배 명목으로 정부허가 없이 방북(4.11)하였으며, 김일성 1주기에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방북(6.28)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은 평양축전에 범민련 남측본부인사를 초청(4.22)했다.

회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전금철을 북한당국 대표로 간주하는 등 北京會談을 당국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제1차 회담시(6.17~21) 주요 議題는 쌀제공 규모와 방법문제였다. 한국은 15만톤의 쌀을 제공하되, 1차로 5만톤을 구상무역 형태로 제공하고, 나머지 10만톤은 南北對話 진전속도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15만톤 모두를 민간 기업을 통로로 제공받기 원했으며, 2~4만톤씩 나누어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¹⁸⁾ 회담 결과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15만톤의 쌀공급이 결정되었다.(6.21)

제2차 회담시(7.15~19)에도 남북한간 異見이 露出되었다. 한국정부는 쌀제공 문제 이외에 쌀의 원산지 표시 인정, 대남비방 중지 및 86우성호 선원 송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담의제를 쌀문제와 경협문제에 국한시킬 것을 재차 주장하고, 원산지 표시와 우성호 선원 송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회담결과 양측은 제3차 회담 일정만을 합의하고, 기타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제3차 회담은 북한측의 쌀 수송선 억류 조치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그 대신 양측은 회담재개를 위한

18) 회담결과 한국정부는 1차로 쌀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반대급부로서 우성호 선원과 선박의 송환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實務接觸을 가졌다. 실무접촉을 거쳐 개최된 제3차 회담(9.27~30)에서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한국정부는 쌀제공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력과정으로 이해하려 했던 반면, 북한은 쌀제공과 남북화해 문제를 분명히 구분했다. 또한 한국은 우성호 선원 送還問題에 대한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했으나, 북한은 쌀 추가지원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다음 회담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회담은 중단되었다.

쌀협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시도는 계속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水害被害에 대해 적십자사와 민간기구(선명회)를 통한 대북 지원을 허가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북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9.18). 그러나 쌀회담 결렬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는 梗塞局面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에도 남북당국간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남북한 頂上會談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에서 權力構圖의 변화징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일의 공식 승계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이미 미국과 핵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북한은 무엇보다 남북간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재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고위급회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1996년에도 特定事案 중심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經濟難 극복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쌀 회담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남북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도 남북한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에 대한 남북대화 재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1996년 상반기에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성호 선원을 전격적으로 송환(12.26)한 사실을 감안하면, 1996년에는 북한과 미·일간 관계개선의 진척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交流·協力分野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한국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94.11.8) 이후 1995년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は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물자교류가 확대되었고,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기업인의 방북과

경제상담이 증가하였다. 南北交易은 1994년과 마찬가지로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과 쌀지원은 교역상의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남북 物資交流의 현황을 승인기준 및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와 <표 4>와 같다. 남북 물자교류의 총규모는 통관기준으로 1995년 10월말 현재 2,182건, 2.5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774건, 1.65억 달러에 비해 51.1% 증가한 수준이다(11월말까지 승인기준 38.8% 증가). 물자교류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전년: 9.2%)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북한 대외경제에서 남북교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반입규모가 북한 총수출액의 약 25%(전년: 21.0%)에 달해 남한은 북한의 주요 의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搬出과 搬入이 총교류액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통관기준으로 각각 21.6%, 78.4%로서 교역에서 반출·입의 不均衡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요 반입품목은 통관기준으로 철강금속(74.7%; 특히 금괴, 아연괴, 빌레트, 열연코일, 은괴, 전기동, 선철 등), 섬유류(13.0%), 농림산물(5.6%; 특히 호두, 낙화생, 버섯류, 들깨 등) 등이다. 반출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섬유류 원·부자재가 주요 품목을 이루었으며, 동정광·설탕 등도 상당량 반출되었다. 한편,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쌀과 병커C유가 각각 2.37억

달러 및 1천만 달러씩 반출되었다.

<표 3> 남북한 물자교류 승인현황(1988.10~1995.11)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총반입	위탁가공	총반출	위탁가공	총합계	위탁가공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	69	-	22,304	-
1990	20,354	-	4,731	-	25,085	-
1991	165,996	23	26,176	13	192,172	36
1992	200,685	556	12,818	413	213,503	969
1993	188,528	4,385	10,262	3,611	198,790	7,996
1994	203,521	16,598	25,423	11,966	228,944	28,564
1995.11	210,005 (180,320)	22,311 (15,505)	64,069 (17,164)	16,380 (11,059)	274,074 (197,484)	38,691 (25,793)
총계	1,012,361	43,873	143,548	32,383	1,155,909	76,256

()내는 1994년 동기실적임.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3호
(1995.11.1~11.30).

<표 4> 남북한 물자교류 통관현황(1988.10~1995.10)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19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19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19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19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1995.10	805	92	196,214	1,377	75	53,925	2,182	167	250,139
	(592)	(70)	(152,022)	(182)	(32)	(13,493)	(774)	(102)	(165,515)
총 계	3,068	-	850,196	1,832	-	97,964	4,900	-	948,160

()내는 1994년 동기실적임. 1995년 수치는 대북 쌀지원을 제외한 것임.19)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3호 (1995.11.1~11.30).

委託加工交易의 현황은 承認基準으로 1995년 11월말까지 3,869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50% 증가한 수준이다. 위탁 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코트, 잠바, 장갑, 아크릴사 등이며, 참여기업은 삼성물산, LG상사, 대우, 고합상사, 한일합섬, 신원 등 19개 회사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LG상

19) 쌀지원(1995.6~10)을 포함한 대북 반출총액(통관기준)은 1995년 10월말까지 487,352천 달러이다.

사가 칼라TV 10대를 委託加工하였다는 것이다.

남북 經濟協力事業으로 남포공단에 대한 대우의 경공업분야 직접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協力事業의 내용은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세개 업종이며, 投資規模는 512만 달러, 투자유형은 합영이다. 대우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3명의 기술자를 6~9월 동안 파견하였으며, 현재 5명을 재파견하고 있다. 그외 고탍물산(의류·봉제, 직물, 이불·솜, 수지병 등 4개 사업, 투자 규모 686만 달러), 한일합섬(스웨터, 봉제, 모포 등 3개 사업, 투자규모 580만 달러), 국제상사(신발생산, 투자규모 350만 달러), 녹십자(의약품, 투자규모 330만 달러), 동양시멘트(시멘트저장용 싸이로 1기 건설·운영, 투자규모 300만 달러), 동릉해운(항만 하역설비, 투자규모 500만 달러) 등이 協力事業者 승인을 받았다.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이후 20여개사의 한국기업인들이 투자 및 교류·협력 상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보인 經濟協力事業은 지역별로는 나진·선봉 및 평양·남포 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별로는 의류·신발·식음료·전자제품 등에서의 위탁가공교역, 컨벤션센터·통신센터·항만시설 등의 기반시설부문 투자 등이다.

한국정부는 대북 경수로지원과 쌀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대통령 방미시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7.26). 이는 앞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중·장기

적인 안목에서 민족공영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5년에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信賴回復과 協力增進의 계기가 마련되어 경색된 국면이 전환된다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社會·文化分野에서의 남북한 交流·協力は 1994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199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1991년 89건에 956명, 1992년 37건에 609명, 1993년 216건에 221명, 1994년 17건에 210명이었으나, 1995년도는 11월말까지 54건에 601명이다.

人的 交流의 구체적 내용은 학술 24건 383명, 문화 7건 64명, 종교 12건 94명, 체육 2건 2명, 언론·출판 1건 3명, 기타 8건 55명 등이다.

1995년에는 소망교회 광선회 목사(8.15~22)와 쌀수송선 승무원 121명(9월)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는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주최로 北京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2.5~2.9)에 남한 177명, 북한 53명의 남녀 대학생

들이 참가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토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국제협의회」(3.28~31)에서는 남북 종교인들의 접촉이 있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범안스님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철과 북경에서 만나 남북공동법요식 개최문제를 협의(4.22)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도 북경에서 만나 佛教交流問題를 협의하였다. 미국 L.A.의 「미주한인교회 평화통일희년협의회 제4회 총회」(6.26~28)에서는 남북기독교인들이 접촉하였다.

중국 遼寧大學에서 개최된 「21세기 동북아 학술회의」(7.16~21)에 남북한 각각 7명과 5명 및 해외학자가 참석하여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북한 나진·선봉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해외 한인학자 통일학술회의」(7.31~8.1)에서는 남한(14명), 북한(6명), 해외동포(6명) 등 총 26명의 학자들이 통일문제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경과 히로시마에서 각각 열린 「정신대문제 국제세미나」(7.3~5)와 「원폭피해 50주년 일본지부대회」(7.6~9)에서도 남북한 참석자 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중국 延吉에서 개최된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 토론회」(8.3~4), 「동북아시아 국제지학심포지움」(8.3~4) 그리고

「'95 전자·정보·통신국제학술회의」(8.8~9), 일본 오오사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원시·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8.4~6) 등에서 남북한 학자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연길에서 개최된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한 학자 55명(남:35, 북:20)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컴퓨터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과 한국: 분단속의 만남, 1945~1995 냉전과 그 이후」 학술회의에서는 남북한 각 2명이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의 중국 長春의 「UNDP 두만강개발계획 교통분야 실무전문가회의」(10.6~9), 北京의 「'95 동아시아청소년지도자회의」(10.8~11), 일본 교토의 「재일대한기독교총회」(10.9~11), 이집트 카이로의 「세계관광기구 제11차 총회」(10.18~22), 태국 방콕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학자회의」(10.20~22) 등에서도 남북한 참석자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도 남북한간 社會·文化 交流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북한핵 및 김일성 조문문제, 우성호 납북사건, 쌀수송선 인공기계양 사건, 비너스호 억류 사건 및 안승운목사 납북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때문이었다.

1996년에도 북한이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내에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1995년 북한이 상대적으로 學術交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1996년에도 학술분야

를 중심으로 제3국에서 남북간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人道主義的 事案

가. 離散家族問題

離散家族問題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매우 민감한 政治的 問題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의 설치 또는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국내에 설치된 9개의 이산가족연락센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접촉을 모색했으며, 특히 해외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미국·일본·캐나다 등의 이산가족상봉추진단체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교환을 시도해 왔다. 이산가족들의 대북 住民接觸 신청과 성사 건수는 1995년 11월 말 기준으로 298건 신청, 94건 102명 성사로 전년도 같은 기간 632건 신청, 132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중 南北對話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한 이산가족문제에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의 단체를 통한 상봉이나 서신교환 등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拉北者問題

1995년에는 우성호와 안승운목사의 납북으로 인해 납북자문제의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었으나,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86우성호의 납북과 관련,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북방송통지문을 통해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5.30)하였고, 외무부장관도 국제적 십자사와 중국, 러시아 등 외교채널을 통해 송환 협조를 요청(6.3)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성호 사건을 한국정부의 사주에 의한 의도적인 領海侵入 행위로 간주하고 북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수로공급협상의 타결이후 북한은 갑자기 우성호 선원의 송환을 발표(12.22)하고 판문점을 통해서 생존자와 사망자의 유골을 인도(12.26)했다.

한국은 中國延邊에서 납북된 안승운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7.25)했으나, 북한은 의거 越北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목사의 송환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제3차 北京쌀회담

시(9.27~30)에도 우성호와 안승운목사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994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人權實態 발표 이후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고상문씨 사건과 관련, 북한은 고상문씨의 의거 입북을 재강조하고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을 통하여 고씨가 남한으로 귀환할 뜻이 없음을 간접 전달함으로써 납북자 송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여 주었다.

1996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안승운목사문제 및 기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우성호 선원은 송환되었으나, 이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며 북한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人權問題

북한내 人權問題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1994년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러시아내 탈북별목공 정착관리 종합대책」과 「북한억류자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탈북별목공 국내정착위원회」와 통일원차관이 주재하는 「북한억류자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民間團體인 「북한인권개선운동

본부」가 출범되었으며, 민족통일연구원내에 「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AI) 산하 人權團體가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의 안위를 우려하는 서한을 북한당국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이 「조선인권연구협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4.26~5.3) 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북한은 조사단에게 북한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國際基準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1987년에 시한을 넘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2차보고서가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총 800~1,000명에 이르는 죄수들이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고, 이중 240명 정도의 정치범이 평양부근의 정치범 수용소(형산재교육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연례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내 인권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에게 調查團의 정기방문 허용 및 개별사례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하였다.

한편, 유엔 제50차 總會에 참가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연설을 통하여 北韓人權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제기(10.28)하였다. 한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측의 발언내용을 반박하고 한국내 保安法과 미출소

공산주의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오히려 비난하였다.

1996년에도 한국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조하에 북한내 인권실태에 대한 資料調査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人權改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995년 國際舞臺에서의 남북간 접촉과 협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1991년 이래 추진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과 관련한 국제포럼 등에서 남북한 정부대표간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양측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가한 國際會議에서 만나 환담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 1995년에 이루어진 정부대표간 접촉사례는 「TRADP 통신전문가회의」(중국 延吉;4.3~5), 「두만강개발계획 제5차 계획관리위원회(PMC)회의」(北京;5.29~6.2), 「두만강개발계획 교통분야 실무전문가회의」(長春;10.6~8) 등이다. 그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정부대표들은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각료회의」(11.22~28)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전문가회의」(11.29

~12.1)에 참가하였으나, 상호간 협력은 없었다.

한편, 民間次元에서도 남북간 접촉이 있었던 바, 일본 쿠시로시에서 열린 「'95 동북아·북태평양 환경포럼」(9.25)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에 관한 종합 백서의 공동작성을 한국 참가자에게 제안하였고, 1996년중 남북 학자들이 북경에 다시 모여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 여름 水害를 당하여 食糧不足과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된 북한은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인도지원국 등의 國際機構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포 5,000매를 북한에 제공(11.22)하였다. 이는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의 좋은 사례였다.

이와 같이 制限的인 接觸이 이루어진 가운데 남북간에는 국제무대에서도 갈등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대한 서신공세 등 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서신을 발송(7.3)하여 유엔군사령부해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제50차 유엔총회에서 북·미간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10.1)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카르타헤지나에서 개최(10.18-20)된 제11차 비동맹회의에서 북·미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유엔 등 國際機構와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

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미 平和協定 체결주장의 부당성과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한 평화체제 전환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북한의 平和協定 체결공세를 무산시켰다.

人權問題도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葛藤要因이 되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1.30~3.10)에서 남북한 인권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었다. 同 회의에서 한국이 발의한 “아태지역 인권증진 결의안”이 채택되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人權改善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한국 등 국제사회의 人權改善 促求와 북한내 인권 실태를 왜곡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1996년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攻防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협력과 共同步調가 부분적이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록

1995년도 主要事件日誌

1. 1 북한, 공동사설 형식의 新年辭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신규가입
1. 3 김정일, 인민군부대 시찰
1. 5 김병식 북한 부주석, 2000년까지 통일완수 주장
1. 7 정부, 지역안보체제 틀내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모색 표명
1. 9 북한, 함흥·청진·김책 등에 대한 한국기업 투자 허용 발표
 정부, KEDO설립 규약에 '한국표준형 경수로' 명기 입장 美 측에 통보
 북한, 북·미합의에 따라 미국상품의 반입제한조치와 미국 무역선박의 입항금지조치 해제 결정
 일본 다케무라 대장상, 방중(~15)
- 1.10 정부, 통일대비 생필품긴급지원 방안 및 남북한 공동상품전시회 추진 계획 발표
- 1.11 미·일, 정상회담 개최
 -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협조

- KEDO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 후원

삼성 투자조사단, 청진 방문

공로명 외무부장관, 대북 경수로지원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수행과 남북한간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협정체제 전환 방침 발표

1.12 정부, 대우·한화·동양그룹·(주)신원 방북 추가 승인

통일원, 제3국 경유 在北가족에 대한 생필품 송부 허용 발표

1.13 한·미·일 경수로지원 실무회담

- KEDO규약에 '한국표준형 경수로' 명기와 사무총장의 권한범위에 대해 이견

일·중, 안보회담 개최

1.14 전국세관장회의, 전국 30개 세관에 북한산물품 통관전담반 설치 발표

1.15 삼성 투자조사단, 북한에 50만달러 규모 전자부품공장 설립 합의

1.16 북한,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KEDO제공 경수로 수용 입장 표명

1.17 (주)신원, 평양에 기업사무소 설치 및 나진-선봉지역에 교 회 건립 합의

1.18 통일원, 기업 대북진출 원칙 발표

2차 북·미 폐연료봉 처리 전문가회의(~21, 평양)

- 1.19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경협 과열경쟁 방지 민간 자율조정
기구 구성 발표
美상원 에너지委, 북핵청문회 개최
- 1.20 미국,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 1.22 북한, 핵무기 완전 철폐 주장
- 핵보유국에 핵무기철폐 일정표 제시 및 NPT의무 이행
촉구
- 1.24 김용순 당비서, 8.15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 당·정·사회단체
대표 및 해외동포 참가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美 공화·민주 양당, 북핵관련 결의안 상·하 양원에 제출
북·IAEA대표단, 핵사찰 이행 협상 재개(평양)
- 1.25 2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2.1, 베를린)
정부, 8.15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남북한 공동개최 및 남
북합의서 이행 논의를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제의
북한-네덜란드 ING은행, 나진-선봉지역에 ING동북아은행
합작 설립계약서 서명
- 1.27 김덕 부총리,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적극
지원 발표
2. 1 북한, 8.15 광복 50주년 기념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한 남북
정당회담 제의

박수길 UN대사, UNDP가 남북한에 제시한 20개 남북공동 사업중 즉시 시행가능한 철도연결사업 등 11개 사업 UN에 통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채택

- 중국내 인권상황 비판

2. 3 공로명 외무부장관, 북한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인정시 남북대화진전과 무관하게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입장 표명

2. 4 미국, 중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조치 발표

2. 6 북한, 한국과 고위급당국자회담 개최 제의

- 한국의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이산가족 참관제의 거부

2. 7 북한, 김정일생일(2.16)을 민족 최대 명절로 제정 발표

2. 8 북한, 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서울)의 북한대표단 초청 수락의사 표명

북한,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과 남북대화는 별개 문제임을 주장

2.10 김덕 부총리, 「원자력 협력에 관한 남북간협정」 체결 필요성 발표

북한, 중립국감독위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철수위협 관련 UN사가 요구한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개최 거부

2.11 한·일 외무부장관, 한국표준형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전 북·

일 수교협상 재개 반대 합의

- 2.15 김덕 부총리, 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 북한대표의 판문점 통과 허용 발표
- 2.15 북한, 미국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 강요시 핵합의 파기 위협
- 2.16 엘친 러시아대통령, '95년 연두교서 발표
- 강대국 지위회복과 국익확보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
- 2.21 나웅배 통일부총리 임명
김용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8.15 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에게 접촉 제의
- 2.23 니시모토 일본 통합막료장, 방한(~26)
- 2.24 한·미, 고위실무협의회 개최
- 한국표준형 경수로 공급 입장 재확인
- '95 T/S훈련 취소 합의
북·러, 임업협정 서명
- 2.23 정부, 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북측 대표단 방한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2.25 국방부, '95 T/S훈련 취소 공식 발표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망
- 2.26 북한, 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불참 발표

LG 대표단 방북(~3.4), TV조립 및 의류분야 임가공 확대
방안 협의

일·러, 국방장관 교환 방문 합의

2.27 미국,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제
획 백지화

미·중,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

2.28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의 단전·단수에 따라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이동

3. 1 김영삼 대통령, 3.1절 기념식사

- 남북 화해·협력시대 진입 촉구

정부, 북한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 거부시 남북 경험활
성화조치 전면 백지화 방침 표명

3. 3 한·미·일 고위실무회담

- KEDO 설립규약에 한국표준형 경수로 채택, 한국 중심
역할 명기 합의

3. 6 북한 해주産 사과 844톤 부산항 입항

김영삼 대통령, 訪獨中 곡물 및 물자 대북 장기저리제공
제의

3. 9 KEDO 공식발족

3.10 북한, 김영삼 대통령의 곡물 및 물자제공 제의 거부

3.14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북·미합의 파기시 강경대응 입장

표명

- 3.16 북한 조평통,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시 모든 남북합의서 백지화 위협
- 3.17 북한 주UN대사, 북·미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기한으로 설정한 4.21은 최종시한이 아니라 목표날짜로 발표
- 3.20 통일원, 남북교역 활성화 위해 국내 10대 도시 貿協支部에 교역상담창구 설치 발표
- 정부, KEDO 한국측 사무차장에 최영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내정
3. 2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지연시 일부 핵시설 재가동 발표
- 3.23 북한, 러시아 연해주 지방정부와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 3.25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27), 경수로 노형 합의 실패
- 3.28 통일원·관세청, 「南北交易對象物品 通關管理指針」 발표
- 3.29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 거부시 경수로공급 자체 무산 경고
- 3.30 북한, 일본 연립여당대표단과 「북·일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합의서」 조인
- 3.31 미국무부, 선명희 대북한 곡물지원자금(9만3천달러) 사용 승인
- 한국기독교협회·조선기독교도동맹, 8.15 판문점 공동예배 추

진 합의

- 4. 3 북한, 제일제당 홍콩현지법인에 설탕·식용유 등 공급 요청
- 4. 5 북한,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철수 발표
- 4. 7 한·미·일 대사급 고위협의회, 한국표준형 경수로 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재확인
- 4. 8 북한,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 불가 재확인
- 4.10 북·미, 직통전화 개통
喬石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일(~17)
- 4.11 안호상 대중교총천교 일행, 개천절 행사 참석 및 단군릉 방문 목적으로 입북
- 4.12 북·미 경수로전문가회담, 노형 등에 관한 합의 실패
- 4.17 喬石 중국 全人大 상무위원장, 방한(~22)
- 4.18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재개(베를린)
- 4.21 8·15 광복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발족
- 4.22 조계종 대표단, 장재철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과 북경에서 5.7 법요식 공동개최문제 협의
북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에게 평측참가 공식 요청서
신 발송
- 4.24 정부, 북한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시 경험차원에서 부대
시설 제공문제 협의 가능 시사
북한, 군창건기념 중앙보고대회

- 4.28 북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개막
- 4.30 정부, 5월부터 종교인 방북 등 남북민간교류 및 남북경협 적극 추진 표명
- 5. 2 무라야마 일본총리, 방중(~6)
- 5. 3 북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북측사무실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 조치 발표
- 5. 7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러(~10)
- 5. 9 이홍구 국무총리 방중(~15)
- 5.10 한·미·일 고위실무회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제공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재확인
- 5.12 NPT 연장회의, 178개 서명국 전원합의로 NPT 무기한 연장 합의
 - 1996년중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 합의
 외무부, 국제사면위원회(AI)의 방북(4.26~5.3) 인권실태조사 확인
- 5.13 북한, 미국의 핵문제 비양보시 동결 원자로 재가동 위협
- 5.15 중국, 핵실험 실시
 -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중(~20)
 - 북한, 아·태관광협회(PATA) 가입
- 5.16 통일관계장관회의, 「북한인권대책실무조사회의」 신설 발표
- 5.17 정부, (주)대우의 북한 남포공단 직접투자사업 승인

- 5.19 그라초프 러시아국방장관 방한(~21)
UN司, 한·미·영 등 UN司대표 4명과 북한간 장성급회담 판
문점 개최 제의
- 5.20 북·미 준고위급회담(팔라툼푸르주재 美대사관)
- 북한: 한국표준형 강요시 핵동결해제 경고, 평화체제 구
축 주장
- 한국: 남북대화 강조,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당사자간 협
의사항 주장
- 5.22 미국, 대만 이등회 총통 방미 허가
일본, 대중 무상원조액 축소 결정
- 5.23 통일원, '96년 남북협력기금 3백억 증액 편성(총 1천5백억원)
북·미 준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경수로 관련 기술적 문제
집중 협의
- 5.24 북·미 준고위급회담 美측대표단, 북측에 제네바합의 이행
일괄타결 제의
- 연락사무소 개설, 중유 10만톤 조기제공, 관계개선 2단
계 조치 실시, 경수로의 부대시설 제공 등
- 북한, 평화협정문제 포함 주장, 미측 반대
- 5.25 북·미 준고위급회담 수석대표회의, 북측 경수로 공급에서
한국의 역할 상당부분 인정
- 5.26 나웅배 부총리, 북한의 쌀원조 요청에 지원 의사 표명

이성록 북한국제무역추진위 위원장, 전제조건 없을시 한국
쌀 수용 용의 표명

- 일본에 쌀 협조 공식 요청

- 5.27 정부, 대북 쌀지원 남북협력기금으로 총당 발표
- 5.29 북·미 준고위급회담 전체회의, 경수로 노형문제 합의 실패
- 5.30 86우성호, 서해상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랍
남북한·중·러·몽골, 두만강경제특구 개발 3개협정 가서명
- 5.31 강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성호 북한적십자회위원장에게
남북 선원및 어선 즉각 송환 촉구
6. 1 클린턴 美대통령,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 발표
6. 2 북한, 북·미 수석대표회에서 10억달러 상당의 부대시설 추
가지원 요구
6. 4 정부, 탈북자 전원 수용을 포함한 북한인권개선종합대책 확
정
6. 7 북·미 준고위급회담, 한국표준형 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중
심적 역할 사실상 합의
美상원 외교위, 대만 유엔가입 지지안 통과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12)
6. 8 美하원, 대북 경수로 지원 관련 국무부의 종합수권법안 승
인
6. 9 日중의원, 不戰決議案 통과

- 6.12 북·미 준고위급회담 수석대표회의, 경수로협상 합의문안 완전 합의
- 6.13 북·미,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으로 경수로협상 합의문안 발표
- 6.15 북한, 한국표준형 경수로 수용의사 표명
갈루치 미핵대사, 북한의 중유전용 조사차 미 전문가 방북 발표
- 6.17 남북 차관급회담, 대북 쌀지원 논의
- 6.16 미·일, 「포괄경제협약」 2년간 연장기로 합의
- 6.19 중국, 해리 우(吳宏達) 간첩혐의로 체포
- 6.21 남북 차관급회담, 1차로 쌀 5만톤 대북 무상지원 합의
- 6.22 訪北 박종규 韓國特殊船會長, 부산-나진간 정기 직항로 개설 합의
- 6.23 박용도 質公사장, 김봉익 북한 삼천리총회사사장과 쌀지원 실무계약서 서명
정부, 최초의 남북경협 시범사업인 (주)대우의 남포공단 직접투자사업 송금(5백12만달러) 허용
북·일, 쌀지원 실무회담
- 6.24 대북 쌀지원 1차분 선적 청진행 씨아팩스號 동해항 출발
재경원, 대북 투자절차간소화 위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정 발표
남북 쌀지원 실무회담, 북경에서 쌀제공 관련 계약서 서명

- 6.30 8천톤, 7.7~8경 4만톤, 8.10까지 10만톤 제공
- 6.25 李鵬 중국총리, 방러(~28)
- 6.26 북한 기독교대표단, 미장로교회 초청으로 L.A. 도착
- 6.27 북·일 쌀지원 실무회담, 대북 쌀지원 규모 합의
 - 총 30만톤(무상증여 15만톤, 유상증여 15만톤) 우선 제공
 - 추후 20만톤 유상 원조
- 6.28 윤용현 유니포스사장, 7.1부터 남북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시작 발표
 - 남성해운, 북한측 압력으로 대북 쌀수송선 씨아펙스호의 태극기 하강 및 인공기 강제 게양 발표
 - 미·일, 자동차협상 타결
- 7. 1 통일원, 인공기 강제 게양 관련 북한 전금철 대외경제협력 추진위 고문 명의의 공식사과문 수령 발표
- 7. 7 북한, 김일성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
- 7.10 북한, 한국측 요구에 따라 지원쌀 인수 창구에 해주·남포항 추가 결정 발표
- 7.14 북한 조평통, 대북 쌀지원 공식 시인
- 7.15 남북 2차 쌀회담(~19), 3차 쌀회담 8.10 개최 합의
 - 북한 김봉건 인민무력부 부부장, 사망
- 7.20 미 의회, 중국내 인권상황 감시 요구법안 통과
- 7.21 중국, 대만해협에서 1차 대규모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26)

- 7.22 대우 기술자 13명, 북한 남포공단 경공업공장 근무차 입북
- 7.25 한·미 정상회담
- 「대북 공동전략 고위협의체」 정기적 개최 합의
정부, 북한의 안목사 송환 거부시 3차 쌀회담 및 경협확대
방침 재검토 발표
- 7.31 KEDO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대체에너지공급·폐연료봉처리
담당 3개 자문위원회 발족
8. 1 북한, 한·미 「대북 공동전략 고위협의체」 창설 비난
- 미국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호응 촉구
미·중, 외무장관 회담
8. 4 북한, '95후쿠오카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의사·통보
미·베트남, 국교 정상화
8. 5 유공, KEDO 주관 대북 중유공급권(2차분 4만톤) 계약
8. 9 통일원, 사진촬영을 이유로 대북 쌀수송선 및 선원 청진항
억류 발표
- 8.10 남북 억류 쌀수송선·선원 송환협상, 북한측 거부
- 8.11 賀公, 북한과 나진-선봉지역사무소 설치 합의
- 8.12 경수로기획단, KEDO 경수로부지조사단 8.15~22 함경남도
신포지역 방문 발표
내외통신, 북한전역에 콜레라 확산으로 수천명의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보도

- 8.14 정부, 15만톤외 추가 쌀지원 않기로 결정
- 8.15 KEDO 경수로부지조사단, 평양 도착
북한, 함흥에서 조국해방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중국, 대만해협에서 2차 미사일발사 훈련 실시(~25)
- 8.17 중국, 핵실험 실시
- 8.18 북한, 폭우에 의한 대규모 수해 발생 보도
- 8.24 한·러,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서 교환·발효
타노프 미 국무차관, 방중(~27)
중국, 해리 우 석방
- 8.30 북한 대외무역부, 북경에서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 개최
(9.22~23) 발표
일본, 대중 무상원조 전면 동결방침 전달
- 9. 2 한·미 국방장관 회담, 「중장기 안보대화」 신설 합의
- 9. 4 북한, 수해로 68명 사망·5백20여만명 이재민·총 1백50억달러
상당 재산피해 발표
- 9. 5 미국무부,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협의차 미국대표단 평양
방문(9.23~30) 발표
클린턴 美대통령, KEDO에 4백만달러 지원 승인
프랑스, 핵실험 실시
- 9. 6 정부, 북한당국의 수해지원 공식 요청시 정부차원의 지원

검토 시사

- 9. 7 러시아, 북한에 「조·소 동맹조약」 폐기 통보
- 9. 8 일·러, 평화조약 실무회의 개최
- 9.11 KEDO·북 경수로 실무협상회담(콜라롬푸르)
- 9.14 나웅배 부총리, 5만달러 상당 의약품·의류·모포 등 대북 수
해구호품 대한적십자사 통해 지원 발표
- 9.18 美하원, 북·미 관계개선 관련 대북 결의안 채택
- 9.20 북한, 북한법에 따라 86우성호 처리 발표
- 9.21 이홍구 총리, 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희망 표명
나웅배 부총리, 貿公의 기업인 집단 방북 불허 발표
- 9.25 나웅배 부총리, 남북선원 송환과 북한인권문제 연계 표명
KEDO사무국, 9.30부터 뉴욕에서 2차 경수로전문가회담 개
최 발표
남북 조류 및 환경학자, 국제환경포럼에서 연구자료 교환
및 자연자원공동실태조사 합의
- 9.27 3차 남북당국자회담(~30), 우성호송환 합의 실패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 방한(~29)
- 9.28 공로명 외무부장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혁·개방을 통
한 북한의 인권보호·개선 촉구
- 9.29 북한 외교부, 원전개발비 전액 보상 요구
- 9.30 KEDO·북, 2차 경수로전문가회담(뉴욕)

- 10. 3 북·일, 대북 쌀 20만톤 공급계약(30년 상환, 유상제공) 체결
- 10. 5 조총련,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에 130명 축하사절단 참가
결정
- 10. 7 코렉스부산號 동해항 출발, 대북쌀지원 완료
미러, '97 NATO 정상회담시까지 NATO 확대 논의 유보
결정
- 10. 8 북한 「로동신문」,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한 체제붕괴 우려
보도
- 10.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광 인민군총참모장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
- 10.10 북한, 당창건 50주년기념행사
- 10.11 나웅배 부총리, 북한의 대남·대내정책 불변과 관련 남북경
협의 현상유지정책 표명
- 10.13 북한, 인민군총참모장에 김영춘 차수 임명
- 10.14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통일대비 남북종합교통망추진안」 발
표
- 10.16 KEDO·북, 2차 고위급회담(뉴욕)
- 10.17 외무부, 핵공급국가그룹(NSG)에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발표
- 10.18 무라야마 일본총리, 한·일합방이 “적법절차에 의한 체결”이
라 망언

- 10.20 비동맹정상회의, IAEA에 대한 협조·제네바합의 이행 촉구
대북 결의문 채택
KEDO, 2차 경수로부지조사단 방북(10.24) 발표
- 10.21 대우, 남포공단 공장건설차 방북 기술자 5명 재파견
- 10.23 미·러 정상회담(뉴욕)
- 10.24 미·중 정상회담(뉴욕)
- 미국,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
- 군사교류·협력 재개 합의
- 10.25 訪美 김영삼 대통령, 북한개방시 과감한 지원 용의 표명
- 10.27 북한, 부여무장간첩사건 한국에 의한 모략극이라 주장
11. 1 UN총회,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촉구 IAEA보고서 결의안
으로 채택
- 찬성 144, 반대 1(북한), 기권 8(쿠바, 중국 등)
11. 2 2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KEDO, 아세안의 KEDO 가입 요청
- 11.10 에토 일본 총무처장관, 한반도 식민지 미화 발언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에서 북한과 긴급구호米·식용기
름 제공협정(8백80만달러 상당) 서명
- 11.13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한(~17)
- 11.14 조셉 나이 미국방부차관보 방중(~18)
- 11.16 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17)

중국, 최초 「국방백서」 발간

11.18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본 대북수교 3원칙 제시

11.19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폴란드 대통령선거, 구공산당 후신 민주좌파연합의 알렉산더 그바스니아프스키 대통령 당선

11.21 정부, 11.27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 방콕 전문가회의에서 동·서해 기름오염방제를 위한 남북환경共助 추진 계획 발표

프랑스, 핵실험 실시

11.23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쌀지원(5천1백40톤) 발표

11.28 일본, 「신방위계획대강」 확정

12. 4 독일 동아시아연합회, '96. 2월 평양에 민간대표부 설치 발표

12. 5 네덜란드 ING社, 평양에 ING동북아은행 개설 발표

12. 6 남북한·중·몽고·러시아, 두만강개발 환경양해 각서 체결
중·러, 군사기술협력협정 체결

12. 9 두만강지역개발사업 참여 5개국, 두만강-동해간 2개의 정기선항로 개설 합의

12.12 KEDO·북한, 대북 경수로 공급협상 타결

북한, IAEA 핵사찰 활동 거부

12.14 보스니아 평화협정 체결

12.15 KEDO·북한,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공식 서명

12.17 러시아 총선, 공산당 제1당으로 부상

12.21 미국, 북한에 식품 원조 제공

황락주 국회의장, 방중(~28)

12.23 미·중 항공협정 체결, 직항로 설치 합의

12.25 김정일, 1개월만에 공식 석상 등장

12.26 남북 우성호, 판문점 통해 귀환

12.28 프랑스, 핵실험 실시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
北亞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和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해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政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
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

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資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4-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4-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 ~ 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 ~ 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 ~ 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 ~ 1995

95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 ~ 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s Relation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上)
- 95-02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下)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年例情勢報告書 9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4725, FAX: 238-329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28일

發行日 1995년 12월 30일
